

체육단체 관련 규정 선진화 방안

최종 결과 보고서

2008. 12

문화체육관광부

제 출 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귀하

본 보고서를

체육단체 관련 규정 선진화 방안

연구용역의 최종 결과 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08. 12

국민체육진흥공단 체육과학연구원

원장 김정만

수행 연구기관

국민체육진흥공단 체육과학연구원

참여 연구진

책임연구 : 성문정(체육과학연구원)

공동연구 : 송명규(체육과학연구원)

고은하(체육과학연구원)

김상겸(동국대학교)

박상주(우석대학교)

- 목 차 -

I. 연구의 개요	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2. 연구의 범위 및 내용	2
II. 체육단체 관련 규정 선진화에 대한 논의	4
1. 선진화의 의미	4
2. 규정 선진화의 추진 배경	5
3. 규정 선진화의 추진 방향	6
4. 규정 선진화를 위한 법적 검토	14
III. 체육단체 관련 규정 현황과 문제점	22
1. 규정 현황	22
2. 문제점	26
IV. 체육단체 관련 규정 선진화 방안	41
1. 대한체육회 주요규정	41
2. 대한올림픽위원회(KOC) 규정	79
3. 국민체육진흥공단 주요규정	89
V. 결론	92
1. 부록1 국민체육진흥기금지원규정	94
2. 부록2 대한올림픽위원회(KOC) 규정	103
3. 부록3 대한체육회 정관	113
4. 부록4 가맹경기단체 규정	135
5. 부록5 시·도지부 규정	150

I . 연구의 개요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연구의 배경

- 대한체육회는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한 법정법인으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체육단체로서 전문체육을 관장하고 있으며, 대한올림픽위원회는 국제올림픽위원회의 한국지부로서 국제올림픽위원회가 주관하는 각종대회를 개최하거나 참가하는 권한을 가진 국내 유일 조직임
- 이처럼 두 체육단체는 국내외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관 및 규정 등이 상위법이나 상위기관의 헌장, 시대 환경 등에 불부합하는 등 구시대적이며 비민주적인 요소가 많다는 비판을 받아옴
 - 즉, 국내 체육단체는 그 역할이 공공재원을 바탕으로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직운영이 소수에 의하여 운영되어 대다수 체육인들의 의견이 포괄적으로 반영되지 못하다는 비민주적인 한계성을 나타내기도 함
 - 또한 회장 궐위시 직무대행 선임절차 규정 불완전, 소수에 의한 회장 선출과 다수 체육인의 의견 반영 불투명, 과거 지향적 규정에 의하여 용어 해석의 논란 등이 발생하여 사회발전과 규정과의 불부합 문제 등이 발생함
- 이에 따라 조직운영에 있어서 전례답습이 강하고, 조직간 기회불균등, 소수의 의한 영향력 강화 등 불합리적 조직운영이 발생하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해 각종 규정의 선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다양하게 제기되고 있음

□ 연구의 목적

- 본 연구는 체육계에서 일고 있는 체육단체 정관과 규정의 비민주적이고 비합리적인 요소들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들을 바탕으로 신정부의 규제 완화와 법규 선진화 작업의 일환으로 체육단체 규정의 비민주적이고 구시대적인 문제점들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2. 연구의 범위 및 내용

□ 연구의 범위

- 현재 우리나라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해서 법적 지위를 부여 받은 체육단체로는 대한체육회와 대한장애인체육회, 국민체육진흥공단 등이 있으며, 국제 올림픽운동과 관련해서 우리나라의 대표성을 갖는 조직으로는 대한올림픽위원회가 있음
- 이러한 4개 단체 중에서 본 연구에서는 대한체육회와 대한올림픽위원회 관련 제 규정과 국민체육진흥공단의 국민체육진흥기금 지원 규정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함
 - 대한장애인체육회 및 대한장애인올림픽위원회의 경우는 대한체육회와 대한올림픽위원회 관련 제 규정과 크게 다르지 않아 대한체육회와 대한올림픽위원회 관련 제 규정 개선안을 준용하면 될 것임
 -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정관과 제 규정 중 국민체육진흥기금 지원 규정만을 연구대상으로 삼은 것은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지원이 체육단체의 자생력 및 조직 경쟁력 강화의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이며, 기타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정관 및 제 규정을 연구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체육인들의 단체이기보다는 체육재정을 조성을 하는 단체로서

위상이 강하여 데 체육단체와 동일하게 비교검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임

□ 연구의 내용

- 체육단체 관련 규정 선진화에 대한 개념 및 법리 분석
- 체육단체 관련 규정 현황 및 문제점 분석
- 체육단체 관련 규정 선진화 방안 개발

Ⅱ. 체육단체 관련 규정 선진화에 대한 논의

1. 선진화의 의미

1) 체육단체 관련 규정

- 현재 체육단체는 대한체육회 및 대한체육회 내 위원회로 되어 있는 대한 올림픽위원회, 국민생활체육협의회, 대한장애인체육회와 그 하부단체(가맹단체, 시도지부)로 구성되어 있음
- 따라서 체육단체 관련 규정이란 이들 각 단체와 그 하부단체의 정관 또는 규정을 지칭함
- 이러한 체육단체 관련 규정은 각각 국민체육진흥법이나 올림픽헌장 등의 상위 법규에 그 근거를 두고 있음

2) 체육단체 관련 규정의 선진화

- 사전적 의미에서 선진화란 발전이나 진보의 단계에서 앞서 가는 과정을 의미함
- 체육단체 관련 규정의 선진화는 체육단체 관련 규정에 있어 발전과 혁신, 질적 고도화를 기하는 과정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음
- 또한 체육단체 관련 규정의 선진화는 보다 포괄적 개념인 체육행정시스템 선진화의 일환임
- 체육행정시스템의 선진화는 개혁 또는 쇄신이 필요한 과정으로 체육행정 시스템에 있어 세계화 · 지식정보화 · 지방분권화 · 고령화 · 광역화 등의 급격한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것, 복잡해지고 다양해지는 국민의 요구와 기대에 부응하는 것을 의미함

2. 규정 선진화의 추진 배경

- 체육단체 관련 규정의 선진화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체육시스템을 선진국형 시스템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것임
 - 선진국형 시스템이란 생활체육 속에서 엘리트 선수가 양성되며 이렇게 양성된 엘리트선수는 공부하면서 운동을 겸비하는 구조를 의미함
- 그 동안 우리나라의 체육은 생활체육과 괴리된 엘리트체육 위주의 불균형 성장, 특히 일부 전략종목을 중심으로 한 국제대회 메달 수 또는 종합순위 향상에 전력하여 '스포츠강국'을 지향해 왔으나 '스포츠선진국'을 향한 노력은 상대적으로 미약했다고 볼 수 있음
 - 우리나라 체육의 선진화를 위해서는 엘리트 체육과 생활체육의 연계 발전을 비롯하여 국민의 체육서비스 수혜 확대 및 다양한 스포츠욕구 충족, 학생 운동선수의 기형적 양성체계 시정 및 학교생활 정상화, 국제무대에서의 스포츠 외교역량 강화, 비인기·소외 스포츠 부문에 대한 정책적 배려, 기타 수많은 과제들이 산적해 있음
- 이러한 선진 스포츠시스템을 향한 과제들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그 추진주체가 되는 체육단체의 운영 시스템을 선진화해야 함
 - 정부수립을 전후하여 설립된 이래 현재까지 유구한 역사를 지니고 있는 우리나라의 체육단체(대한체육회, KOC)는 오랜 기간이 경과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운영체제와 관련규정에서 큰 틀의 변화 없이 대체로 관성적으로 유지되어 온 경향이 있으며, 설립 당시와는 판이하게 변화된 체육부문의 대내외 여건변화를 반영하여 이들 체육단체의 운영체제와 관련규정의 전면적인 재검토와 조정 필요함
- 따라서 선진 체육시스템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체육단체의 경영철학과 사업구조 등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각계의 체육인과 일반국민의 여론을 폭넓게 수렴하여 합리적인 의사결정과 효율적·형평적인 자원배분이 달성될 수 있도록 체육단체의 운영체제와 관련규정의 재정비가 요구됨

3. 규정 선진화의 추진 방향

1) 접근 방법

□ 체육환경 변화에 부응한 제도적 혁신

- 체육단체 관련 규정의 선진화는 체육계를 포함한 국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한국체육의 발전, 즉 스포츠강국이 아닌 스포츠선진국을 목표로 하는 '제도적 혁신'을 지향해야 함
- 체육단체 관련 규정은 하나의 '제도'라고 할 수 있고, 기본적으로 제도는 관련된 개인이나 집단의 행위를 제약(constraining) 또는 조장(enabling)함으로써 특정한 정책결과를 만드는 일차적 요인이 될 수 있음
- 제도는 일단 형성되고 나면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게 특권적 지위를 부여하게 되며, 이에 따라 수혜집단은 현 제도를 지속시키려고 노력하는 경향(정용덕 외, 1999)이 있음
- 설령 새로운 제도가 대부분의 집단이나 개인에게 혜택을 가져다 줄 수 있다고 해도 변화에 소요되는 비용과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현 제도의 유지를 가능케 하는 측면도 있음
- 결국 제도는 애당초 그 제도가 성립될 수 있었던 사회적 환경이 변화하고 이에 따라 전혀 새로운 기능적 요구가 제기된다 할지라도 그 자체가 지속되는 경향을 지니게 되고, 이러한 제도는 미래의 시점에서도 지속적으로 정책선택과 변화 방향을 제약하게 됨
- 따라서 체육단체 관련 규정의 선진화는 제도 자체가 지닌 상기의 관성적 속성을 감안하여 '의식적인 혁신'의 차원에서 접근해야 함
 - 체육단체 관련 규정에 있어 현재의 여건과 한국체육의 향후 발전목표에 비추어 적합하지 않은 조항 또는 미비된 조항에 대해 소폭의 미세 조정 수준을 넘는 뚜렷한 개선과 변화가 필요함

□ 공공기관 선진화 추세에 부응

- 현재 체육단체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 공공기관의 일부인 기타공공기관으로 분류되고 있음. 따라서 체육단체 관련 규정의 선진화는 공공기관의 역할과 기능, 운영방식에 대한 국민적 요구와 정부의 정책방향과도 큰 틀에서 부합될 수 있어야 함
 - 공공기관은 사회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기관의 자기이익 추구적인 사업 확장, 조직과 인력의 방만성, 경영혁신을 통한 효율화 노력의 저조, 생산자 본위의 경영활동과 고객만족 노력의 취약 등의 문제를 지적받아 왔음
- 따라서 공공기관의 공익성, 책임성, 효율성,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관리체계 개선, 지속적인 경영혁신과 구조조정, 성과관리 및 내부경쟁의 강화, 투명경영, 대국민 서비스 강화 등이 요구되고 있으며 체육단체 관련 규정의 선진화도 이러한 요구에 부합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함

□ 특수법인으로서의 역할 충실화

- 대한체육회를 비롯한 주요 체육단체는 법리상 특수법인으로서 그에 따른 역할과 규범에 충실해야 함
 - 특수법인은 개별 법률에 근거를 두고 직접 법률에 의하여 법인격을 부여받아 설립되거나 또는 당해 법인의 명칭과 조직 등 실체적 근거는 개별 법률에 근거를 두되 정관을 작성하고 주무부처에 등록 또는 인가를 받는 등 특별한 설립행위에 의하여 법인격을 부여받는 것으로, 주무관청의 인·허가행위에 의해 법인격이 부여되는 민·상법상의 비영리법인과 구별됨
 - 특수법인은 국가 등의 재정지원, 국가사무의 수탁 처리, 공공기능의 수행 등을 주요 특성으로 하며 공공성의 실현 및 공공적 사무의 가변성에 따른 조직변화가 요구됨
- 특수법인은 본래 국가가 담당할 업무의 일부를 국가로부터 위탁받아 수

행하기 때문에 행정조직법의 원리인 법률유보의 원칙, 민주주의의 원칙, 능률성의 원칙에 바탕을 두는 동시에 특수법인의 특성을 반영한 적법성의 원리, 공익성의 원리, 효율성의 원리, 자율성의 원리 등이 준수되어야 함

2) 주요 초점

□ 민주성의 제고

- 체육단체 운영의 민주성은 체육단체가 체육인 및 국민 전체의 의사를 존중하여 그 요구를 수렴하고 이를 단체운영 및 정책결정에 반영함으로써 대응성을 제고하고 책임행정을 구현하며 일부 특수 계층이 아닌 체육인 및 국민 전체를 위한 단체 운영이 되게 하는 것임
- 체육단체 운영의 민주성을 위해서는 광범위한 참여와 대표성이 확보되어야 함
 - 체육단체의 고객인 체육인과 일반 국민들이 자신들의 이익과 관련되는 정책 과정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하고 체육단체가 체육인 전체, 나아가 일반 국민까지도 대표할 수 있는 장치가 관련 규정에 마련되어야 함
- 또한 체육단체 운영의 민주성은 체육단체의 정책 결정이나 집행에서 관련 대상자들이 동등한 대우를 받도록 보장해 줄 것을 요구함
 - 다양한 견해와 이익들이 표출되고 취합되는 체육단체의 정책과정에서 일부 집단들의 견해와 이익만이 반영되거나 그러한 집단들이 더 큰 혜택을 받아서는 안 되며, 관계되는 모든 집단들이 동등하게 참여하고 고르게 수혜를 받도록 보장해 주어야 함
- 따라서 체육단체 관련 규정의 선진화는 우선적으로 체육단체의 지배구조와 정책결정·집행과정에서 이러한 민주성의 가치를 제고하는 방향으로 개정작업이 이루어져야 함

- 회장 선출방법, 선거인(대의원) 대표성 문제, 이사회와 각종 위원회의 구성 및 대표성 문제, 주요 의결절차 등

□ 합리성(합목적성)의 제고

- 합리성은 어떤 행위가 궁극적 목표달성의 최적 수단이 되느냐의 여부를 가리키는 개념으로, 체육단체 관련 규정에 있어 이러한 합리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체육단체의 제반 규정들이 보다 일반적인 규범 또는 상위의 규범과 부합되는가, 한국체육의 발전이라는 궁극적 목적 또는 체육계의 현재적 조건과 부합되는가, 불필요한 제약이나 바람직하지 않은 유인·보상 구조를 형성하고 있지 않은가, 지원·조장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근거 규정이 미비되어 있지 않은가 등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함
- 예컨대 대한올림픽위원회(KOC)는 국제규약인 올림픽헌장에 의거하여 설립된 기구임에도 불구하고 국내 단체인 대한체육회의 하부 위원회로 되어 있는 현행 대한체육회 규정, 대한올림픽위원회의 위원구성에서 올림픽선수총장이 아닌 체육회 사무총장이 포함된 규정, 임원으로 명예회장을 두고 있는 규정, '참여'라는 위촉위원을 두고 있는 것 등은 합리성 또는 합목적성 측면에서 재검토되어야 함
- 기타, 체육단체 관련 규정에서 현재의 여건상 적절성이 낮거나 불필요한 간섭과 제약을 가하고 있는 규정, 한국체육의 발전을 위한 새로운 접근과 제도가 도입되거나 특별한 지원·조장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근거 규정이 미비된 경우 등도 검토 대상임

□ 공익성의 제고

- 공익은 사회 일반이익, 공동선, 공동이익 등으로 정의되며 사회 내 불특정 다수의 이익이라고 할 수 있음
- 체육단체는 공공기관으로서 공익성의 실현이 매우 중요하며 이러한 체육단체 운영의 공익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체육단체 관련 규정에서 민주

적이고 전문적인 의사결정 과정이 확보되어야 함

- 즉 체육단체가 사회 공공의 이익과 보다 부합하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민주성의 제고와 함께 단체운영의 전문성이 강화되어야 함
- 또한 체육단체의 규정에 나타난 목적, 조직, 사업 등의 체계가 국민의 체육 수혜에 저해요소로 작용하거나 체육발전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부분은 없는가 하는 측면을 검토해야 함
- 공익성은 정치적 중립성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음
 - 체육단체 운영에 있어서 공익성이 구현되려면 체육단체의 경영진이 특정 정파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휘둘리지 않고 정치적으로 중립적일 수 있어야 함
 - 예컨대 시·도 체육회장을 자치단체장이 당연직으로서 겸직하게 되어 있는 현행 규정은 체육단체의 정치적 중립 및 공익성을 훼손할 수 있음

□ 책임성과 투명성의 제고

- 체육단체 임·직원이 도의적·법률적 규범에 따라 행동하게 하는 제도적 장치가 강화되어야 하고 체육단체 운영의 성과 및 고객의 만족에 대한 책임이 강화되어야 함
 - 예컨대 대한올림픽위원회 정관에서 임원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자가 취임하기 전까지는 그 직무를 수행하도록 한 것은 주요 의사결정 사항에 대한 책임성을 저해할 수 있음
- 또한 체육단체의 의사결정과 집행활동이 외부로 명확히 드러나고 효과적으로 감시·평가·통제될 수 있는 체제가 확보되어야 함
 - 감사의 선임방식과 역할, 총회의 구성·소집·의결방식은 적절한가?
 - 비상임이사의 비율과 자격요건, 기능은 적절한가?
 - 자산관리 및 회계책임의 명확화를 위한 규정은 충실하고 정교한가?
 - 현재 가맹경기단체에 대한 체육회의 회계감사제도가 필요적 규정이 아닌 임의적 규정으로 되어 있는데 그로 인한 도덕적 해이의 소지는 없는가?

- 조직투명성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규정상 마련되어 있는가?
- 그 밖에, 현재 지방자치단체는 그 산하기관의 하나인 지방체육회에 대해 경영평가를 수행함으로써 외부통제를 도모하고 있는데 앞에서 예로 든 자치단체장의 지방체육회장 겸직제도는 외부통제의 의미를 퇴색시키는 문제도 발생시킴

□ 적법성의 실현

- 적법성 또는 합법성은 법률의 정신을 최대한 살리는 것이며, 일반적으로 특수법인이 법률에 적합하도록 설치·운영되기 위해서는 특수법인에 대하여 첫째,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침해하거나 부담을 초래하지 않아야 하고 둘째, 특수법인의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한 적절한 권익구제 수단이 있어야 하며 셋째, 특수법인의 행위도 일반적인 예측가능성과 일관성이 확보되어야 함
- 이러한 차원에서 우선 체육단체 관련 규정이 체육단체의 존립근거가 되는 각종 상위 법규(헌법 및 각종 법령과 올림픽헌장 등의 국제규약)와의 관계에서 배치되는 조항이 없는지 면밀한 분석을 요함
- 그 외, 조항의 의미가 불명확하여 체육단체 운영의 예측가능성과 일관성을 저해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검토 필요
- 대한체육회 정관에서 임원의 임기 기산을 일수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정기총회를 기준으로 함으로써 정기총회의 개최 여하에 따라 좌우될 수 있다는 문제, 회장의 사임서 제출에 대한 규정이나 제출처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문제, 회장후보의 자격기준이 불명확하고 추상적이라는 문제, 정기총회의 소집일자가 구체적으로 명기되어 있지 않아 조직운영의 예측성이 결여된 문제
- 대한올림픽위원회 규정에서 위원장 사임에 관한 조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문제, 위원의 자격상실에 관한 조항이 모호하다는 문제

□ 효율성의 제고

- 체육단체 관련 규정이 조직운영에 있어 불필요하고 번거로운 절차나 낭비요소, 기능이나 업무의 중복관계, 정보비대칭에 따른 도덕적 해이의 소지, 기타 비용유발적인 요소를 포함하고 있지 않은지에 대해서도 검토하여 필요시 수정 또는 보완이 바람직함
- 예컨대 대한체육회 정관에서 국제협과 기능적으로 중복되는 생활체육위원회 설치 규정을 명문화하고 있다는 문제 등

□ 형평성의 제고

- 특수법인은 정부조직과 달리 운영의 탄력성을 갖고 있어 자칫하면 특정의 집단에게 이익이 되고 다른 집단의 사람들에게 불공평한 대우를 하기 쉬우므로 형평성의 제고에 노력해야 함
- 체육단체 관련 규정에서도 체육계의 각 부문이나 집단 간의 관계에 있어서 특정집단의 소외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함
- 중앙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외될 가능성이 큰 지방체육회
- 인기스포츠의 그늘에 가려진 비인기스포츠 종목 관계자
- 여성, 노인, 장애인 등의 사회적 약자 집단

□ 분권화 및 자율화 추세에 부응

- 오늘날 공공부문의 혁신은 기본적으로 탈관료화(debureaucratization)를 지향하여 독점·계층제·내부규제 중심의 전통적인 조직관리 방식보다는 경쟁·분권·참여·자율과 같은 요소를 도입·확대하는 추세에 있음
- 이러한 분권적·참여적 관리는 시민과 고객의 요구에 민감하게 대응하고 조직운영의 창의성을 진작시킴으로써 공익을 실현할 수 있게 해주며, 더욱이 체육부문은 공공부문에 있어 대체로 지방분권적 공급에 적합한 자원배분 기능에 해당하므로 분권화와 자율화의 이점을 충분히 누릴 수 있음

- 분권화를 통해 한국체육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치적 견해를 반영할 수 있으며, 각계각층의 시민들이 폭넓게 참여할 기회를 얻게 되며, 획일적 표준이 아닌 지방의 필요와 선호에 부합하는 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됨
- 따라서 현재 중앙집권적 구조로 되어 있는 체육단체에 있어 가맹경기단체나 지방체육회 등으로 권한을 이양하여 분권화를 유도하고 이를 통해 자율성과 자기 책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4. 규정 선진화를 위한 법적 검토

1) 현대사회와 스포츠의 역할

- 현대사회에서 스포츠가 갖는 사회적 비중은 날로 커지고 있으며, 연일 보도되는 언론의 스포츠뉴스는 스포츠가 현대인에게 얼마나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음¹⁾
- 스포츠는 국가의 위상을 높이는 수단으로 사용되기도 하고, 사회의 통합을 이루는 방법으로 활용되기도 하며, 나아가 스포츠를 통한 국력의 강화 내지 국가경제의 발전을 꾀하는 수단으로도 활용되고 있음
- 스포츠는 국가와 사회뿐만 아니라 개인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면서 그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연중 내내 개최되는 각종의 스포츠 국내외 대회, 사회스포츠의 발전을 통한 스포츠의 생활화, 프로스포츠의 확대와 스포츠산업의 발전, 그리고 이를 위한 스포츠에 대한 국가의 지원과 육성 등은 스포츠가 현대사회에서 자리 잡고 있는 위치를 보여주는 것임
- 그러나 스포츠의 영역이 확대되고 발전하면서 삶의 질이 향상되는 긍정적인 면과 함께 각종의 이익다툼으로 인한 스포츠분쟁도 빈번해지는 부정적인 면도 커지고 있음. 특히 스포츠의 경제적 가치가 증가하면서 이로 인한 이해관계가 더욱 첨예하게 되고 갈등과 대립이 많아지며, 스포츠활동의 대상이나 영역이 넓어지면서 각종 분쟁은 스포츠의 자체적 해결뿐만 아니라 국가의 실정법에 의한 해결을 요구하기도 함
- 스포츠는 처음부터 국가권력과 관계없이 조직을 구성하면서 발전해온 것은 사실임
 - 스포츠는 오랫동안 자체적으로 규칙을 제정하고, 그 규칙에 따라서 경기를 하고 운영되었으며,

1) 지상파 방송국은 저녁뉴스시간에 스포츠뉴스를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스포츠전용 위성 방송채널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일간지 역시 스포츠란을 최소한 1-2면 할애하고 있으며, 스포츠신문들도 발간되고 있다.

- 스포츠단체는 국제적으로 조직화되어 있고, 그 조직의 구성원인 스포츠 선수 내지 스포츠종사자들은 단체가 자체적으로 제정한 자치규칙에 의하여 스포츠 활동이 구속되고 있음²⁾
- 오늘날 스포츠는 국가의 영역 속에 들어와 있으나, 과거부터 가지고 있던 자치권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음. 스포츠 자치권의 행사로 제정된 규칙 스포츠조직에 가입한 구성원들에게 적용되고 있으나, 이 역시 해당국가의 실정법의 보호 하에서 효력을 가지게 됨
- 스포츠의 자치권은 스포츠에 참여하거나 자들의 상이한 이해관계를 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며, 스포츠의 자치권은 개개의 스포츠인을 위하여 요구되는 것이 아니라, 스포츠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자들의 이익을 위하여 요구됨
- 각 스포츠협회는 그들이 정한 규칙에 따라서 당해 스포츠의 발전과 소속 스포츠인의 이익을 위하여 활동하며, 스포츠협회는 규칙의 제정과 집행자로서 개별 스포츠인과 산하단체 간의 이익을 조정하기도 함
- 그러나 점증하는 경쟁 속에서 스포츠협회의 이해관계는 스포츠의 성공을 위하여 노력하는 스포츠선수들, 또는 스포츠종사자들 간에 분쟁을 발생시킴. 특히 최근 사회의 민주화와 달리 스포츠계의 과거 관행의 답습은 여러 문제를 야기하고 있음
- 선수들에 대한 구타 내지 폭행, 불합리한 제도나 계약 등으로 발생하는 여러 분쟁들은 이제 더 이상 스포츠가 자체적으로 해결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임
- 스포츠로 인한 분쟁은 스포츠가 독자적인 분야를 구축하여도 그 이해관계가 침해하게 대립하여 권리의 다툼으로 변하면 스포츠자치권의 영역은 후퇴하고 실정법의 적용범위로 들어오게 됨. 이렇게 스포츠단체의 자치권 행사가 실정법에서 보호하는 구성원인 선수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또는 스포츠규칙의 범위를 넘어서는 법익의 충돌이 발생한다면 국가법의 개입

2) 여기서는 스포츠단체와 체육단체라는 용어를 구분없이 혼용한다.

은 필연적임

- 스포츠가 국민의 생활의 한 부분이 된 이상, 스포츠에 관한 실정법의 구축은 국가의 필수적인 의무임. 우리나라는 1962년 국민체육진흥법의 제정 이후 현재까지 약 50개에 이르는 실정법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음
 - 스포츠와 관련하여 기본적인 법률로는 국민체육진흥법과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 있음
- 21세기는 세계화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시대로 국가 간의 스포츠의 교류나 수시로 개최되는 국제경기대회가 더욱 확대될 것이며, 국가 내적으로는 경제의 발전으로 인한 스포츠의 생활화 내지 오락화 등의 급속한 진전으로 스포츠분야에서 법률수요의 급증으로 법제화의 필요성이 더욱 커질 것임
- 따라서 스포츠에 대한 국민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국가의 역할은 더욱 커질 것이고, 이와 관련하여 체육단체의 선진화를 위한 관련 규정의 정비가 필요함

2) 스포츠자치권과 스포츠단체의 법적 지위

가. 스포츠자치권과 법

- 스포츠는 오랜 역사를 갖고 발전해 왔기 때문에 그 고유영역을 인정받고 있음. 그렇지만 오늘날 국가의 틀 속에서 스포츠는 법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음
 - 스포츠는 국가 법질서 내에서 자발적인 조직을 구성하고 독자적인 규칙을 제정하고 관철하며, 스포츠의 자치규칙은 세계화된 스포츠조직 속에서 효력을 갖는 사적 규범으로서 역할을 함
- 국가의 법질서는 스포츠의 영역에서 그 효력에 한계를 가짐
 - 스포츠 자체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그것이 설혹 법에 의하여 보호할 가치

- 가 있는 것이라 하여도, 가능한 한 스포츠의 자치성을 인정하여 실정법의 적용이 자제되나, 민·형사상의 문제가 발생한다면 국가는 개입하게 됨
- 특히, 인권침해나 재산상의 문제는 더 이상 스포츠의 영역만은 아님
 - 물론 스포츠의 각종 규범은 실정법과 달리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 않으나, 국가 법질서의 기본원칙들을 수용하여 스포츠 구성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스포츠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함
 - 그렇지만 스포츠단체에 의하여 만들어진 규칙들은 그것이 국내적으로나 국제적으로 스포츠의 자치법규로서 효력을 가지게 되는 것과 관계없이 실정법과 동등한 효력을 가지지 못함
 - 따라서 법으로부터 스포츠의 자유로운 영역은 똑같은 척도에서 실정법에 의하여 한계가 정해지며, 인간의 모든 활동이 국가의 법질서 아래에 있는 것처럼 스포츠도 국가에 예속되어 법질서 아래에 놓이게 되는 것임
 - 스포츠법의 또 다른 부분은 국가법에 의하여 구성된다는 것임
 - 스포츠단체는 세계적인 조직을 갖고 있으며, 사적으로 조직되기 때문에 국제법이 적용될 가능성은 없으며, 개인을 위한 보호규정도 거의 없기 때문에 대부분 국내법이 적용됨
 - 스포츠단체는 사적자치의 원칙에 의하여 자체적으로 규칙을 제정하고 적용하나, 스포츠에서 분쟁이 발생하여 자치규범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경우 전담 법원이 없기 때문에 법률에 따라서 당연히 국가의 사법권이 적용됨
 - 그러나 스포츠의 자치규칙은 국가의 법질서와 충돌 내지 갈등의 소지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스포츠는 국가의 법질서를 존중해야 하고, 국가는 스포츠의 자치영역을 존중하여 그 특수성을 인정해야만 하는 것임
 - 스포츠자치권과 스포츠에 관련된 실정법과의 관계는 각국마다 주어진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정하기는 어렵지만 일정한 기준을 확립하여 구분을 해야 할 필요가 있음. 그렇지 않은 경우 스포츠의 자치권은 국가의 실정법 틀에 예속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임
 - 스포츠의 국제화에서 특기할 만한 것은 스포츠조직의 국제화를 통하여

스포츠조직의 영향력이 점차 강화되고 있다는 것임. 특히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강력한 국제조직으로 국제사회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음

- 올림픽경기대회의 개최라는 세계적 행사를 주관하면서 동 위원회의 위원들은 외교관 대우를 받으면서 활동하고 있음

나. 체육단체의 법적 근거

- 한 국가 내의 모든 단체는 헌법으로부터 법적 근거를 갖음
 - 헌법에 의하여 그 권한을 행사하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경우를 제외한 대부분의 단체는 헌법상의 결사의 자유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그 설립과 구성의 자유를 보장받음
 - 체육단체의 경우 최상위의 단체라 할 수 있는 대한체육회는 국민체육진흥법에 근거하고 있으며, 국민체육진흥법은 체육단체의 육성에 관하여 여러 규정을 두고 있음
- 이 법은 제33조 제1항에 “체육 진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과 활동을 하게 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대한체육회를 설립한다.”라고 하여 대한체육회의 설립근거를 두고 있음
 - 동 조항에 의하여 대한체육회는 법인으로 하고 정관에 의하여 지회나 지부를 둘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에 의한 수익사업도 가능하도록 하고 있음
 - 반면, 대한체육회에 관한 제반 사항은 정관에서 규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민법의 준용규정도 두고 있음
- 이러한 법의 태도는 체육영역의 자율권을 보장하면서도 국가법에 의한 규율이 되도록 하고 있다는 것임. 그래서 국민체육진흥법 제41조에 의하여 조세 감면 등의 혜택을 부여하면서, 제43조에는 국가의 감독을 받도록 하고 있음
- 이렇게 실정법에 의하여 국내 체육단체에 대한 국가의 감독권을 인정하는 것은 스포츠자치 역시 국내법질서 내에서 규율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함

다. 체육단체의 구성과 법적 성격

- 스포츠자치권은 스포츠단체의 조직권과 규칙제정권 등을 그 내용으로 함
 - 먼저 스포츠단체의 조직적 특성을 보면 우리나라의 경우 스포츠단체는 법인화되어 실정법으로부터 보호를 받고 있음
 - 대한체육회 및 국민체육진흥공단은 국민체육진흥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이고, 국민생활체육협의회, 대한체육회의 가맹경기단체 등 그 밖의 체육단체는 민법상의 비영리 사단법인에 해당됨
- 이처럼 현재 각 가맹경기단체는 민법상의 비영리 사단인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법인 등록이 되지 않은 임의단체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도 있음
 - 우리나라의 축구협회 혹은 육상경기연맹과 같은 각 종목별 체육단체들은 비영리사단법인으로 대한체육회의 가맹경기단체로 가입하여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음
- 대한체육회는 모든 아마추어 스포츠단체들과 시·도 단위의 체육단체를 수용하는 국가적 단위의 최상위 조직임. 외국에서 조직된 스포츠단체들도 이와 동일한 방법에 의하여 국제적인 스포츠단체를 구성함
- 국제적 스포츠단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의 각 종목별 스포츠단체의 대표자로 구성된 대한올림픽위원회는 우리나라의 스포츠가 올림픽경기대회에 참가하도록 하는 업무를 위원회규정을 통하여 수행하고 있음
 - 그러나 한국의 올림픽위원회는 현재 규정에 의하여 대한올림픽위원회라는 명칭으로 대한체육회와 통합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국제적으로는 국제올림픽위원회(IOC)의 산하에 국가단위의 조직으로 되어 있음
 - 그런 점에서 현재 우리 대한체육회 산하에 대한올림픽위원회(KOC)가 있는 구조는 국가스포츠조직이 국제올림픽위원회의 산하에 있게 되는 문제를 발생시키며, 이 때문에 대한체육회와 대한올림픽위원회의 분리문제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전개되는 원인이기도 함
- 이러한 스포츠단체의 시스템은 특성상 독점적 구조를 갖는데, 이는 각 스포츠 종목마다 피라미드조직의 최상위에 있는 단체가 책임을 갖는다는 것을 의미함

- 이러한 종목별 하나의 연맹원칙은 대한체육회 및 각 가맹경기단체들이 그 스포츠 종류의 최상위 조직으로서 회원 자격을 허용함으로써 이루어지며 조직구성은 국제적 조직을 통하여 체계화되어 있음
- 국제올림픽위원회의 조항과 같은 국제스포츠연맹의 정관에 의하면, 각 스포츠종목의 국제적 스포츠조직에는 오직 국가단위의 최상위 단체만이 가입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3) 국가의 과제로서 체육단체의 선진화

가. 스포츠조직체계에 관한 문제

- 현행 스포츠관련법에서 조직은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고 권한배분에 있어서 문제가 있음. 현재 국민체육진흥법상 대한체육회는 아마추어 스포츠연맹들을 총괄하는 위치에 있으며, 동법 제43조에 의거하여 문화체육관광부의 간섭과 통제를 받으며, 문화체육관광부는 정부조직법에 의하여 스포츠에 관하여 관장함
- 스포츠와 관련하여 또 다른 기관으로는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하여 특수법인으로서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은 경륜과 경정사업의 주체로서, 한국마사회법상의 특수법인인 한국마사회는 경마를 개최하고 운영함
- 이와는 달리 국민생활체육협의회는 전국의 조직망을 갖고 있는 민법상의 사단으로 국가와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부터 자금지원을 받으며 생활체육을 활성화하고 있음
- 오늘날 행정조직의 민영화 내지 민간에게 위탁·운영하는 것이 대체적 경향이라는 점에서 스포츠에 관련하여 행정조직의 효율성을 위한 정비가 필요함. 대한체육회에 있는 대한올림픽위원회는 그 특수한 성격으로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되어야 하기 때문에 법규에 가능한 한 명문의 규정을 두는 것이 바람직함

나. 현행 체육단체 관련 규정의 문제

- 현행 체육단체 관련규정을 보면 국민체육진흥법에 제33조에 대한체육회, 제34조에 대한장애인체육회, 제35조에는 한국도핑방지위원회, 제36조부터 제39조에는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등을 규정하고 있음
 - 동 법에는 대한올림픽위원회에 관한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이는 국제올림픽위원회와 관련하여 국가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점에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국제올림픽위원회의 규정 제28조에는 국가올림픽위원회에 관하여 그 자치권을 보장해야 하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29조는 그 구성에 있어서 독자성을 요구하고 있음
- 대한체육회의 정관은 13장 70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음. 동 정관은 체육단체의 자율성을 유지하는 가운데 국내법질서 하에 있는데, 그런 점에서 보면 국민체육진흥법 뿐만 아니라 체육관련법 등 각 실정법의 내용과 상치되는 규정은 위법의 문제를 야기한다고 할 수 있음
 - 먼저 정관 제2조의 목적 조항에 가맹단체에 대한 지원육성만 규정하고 있는데, 이들 단체뿐만 아니라 지방체육회에 대한 지원육성도 포함시켜야 함. 특히 지방자치의 시대에 지방체육의 활성화와 진흥은 국가의 체육정책의 목표이기도 하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함
 - 동 정관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조직과 관련된 규정들이라 할 수 있음. 체육 역시 국가의 중요한 정책에 한 분야이며 사회문화적으로 중요하다는 점에서 헌법이 추구하는 기본원리와 제 원칙에 입각하여 규정되어야 함. 즉, 구성에 있어서 민주주의원리와 권한배분 등의 제 원리와 원칙이 적용되어야 하며, 더구나 지방분권화의 시대에 지방체육회에 대한 가맹단체화와 이에 상응하는 참여와 권한 등이 배부되어야 함
 - 그리고 조직과 관련하여 대의원총회의 법적 지위를 최고 의사결정기관의 격상시켜야 하고, 이사회가 최고집행기관이 되는 것은 구성원리에 맞지 않기 때문에 집행기관인 사무처와 관계를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

Ⅲ. 체육단체 관련 규정 현황과 문제점

1. 규정 현황

1) 대한체육회 주요 규정

가. 정관

- 대한체육회 정관은 1954년 제정하여 전체 13장 70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체육운동을 범국민화하여 학교체육 및 생활체육의 진흥으로 국민의 체력 향상과 건전하고 명량한 기풍을 진작시킴과 아울러 본회에 가맹한 경기단체를 지원육성하고 우수한 경기자를 양성하여 국위선양을 도모함으로써 민족문화 발전에 이바지하고 나아가 스포츠를 통한 국제친선과 세계평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이 정관에서는 조직(제2장), 임원(제3장), 대의원총회(제4장), 이사회(제5장), 대한올림픽위원회(제6장), 각종위원회(제7장), 가맹단체(제8장)등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나. 가맹경기단체 규정

- 가맹경기단체 규정은 2004년 제정하여 전체 12장 41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경기단체는 각 소관 경기운동을 국민에게 널리 보급하여 국민체력을 향상케 하며, 건전하고 명량한 기풍을 진작하는 한편 경기인 및 그 단체를 통할·지도하고 우수한 경기자를 양성하여 국위선양을 도모함으로써 민족문화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이 규정에서 정한 사업을 관장하도록 하고 있음
- 이 정관에서는 경기단체는 당해 종목의 대표성을 가지고 전국을 통할할

수 있는 용어로서 각 경기단체가 명칭을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가맹경기단체의 사업(제2장), 권리와 의무(제3장), 임원(제3장), 대의원총회(제4장), 이사회(제5장), 시도지부(제9장)등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다. 시도지부 규정

- 시도지부 규정 1979년 제정하여 전체 8장 33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규정에서는 시도지부 설치목적은 체육운동을 범시(도)민화하여 학교체육 및 생활체육의 진흥으로 시(도)민의체력향상과 건전하고 명량한 기풍을 진작 시킴과 아울러, 가맹경기단체와 체육단체를 통할지도하고 우수한 경기자를 양성하여 스포츠를 통한 시(도)민의 위상을 선양도모 하므로써 시(도)민 문화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이 정관에서는 시·도체육회는 본회 시·도지부로써 지역을 통할할 수 있는 용어로 ○○○○체육회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조직(제2장), 임원(제3장), 가맹경기단체(제4장), 산하 각급 체육회(제5장), 등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라. 전국체육대회 규정

- 전국체육대회 규정은 전체 13장 88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국체전에 대한 관한 권리(제2조)와 개최기간(제5조), 대회엠블런에 대한 권리(지12조), 개최지 선정(제3장), 조직위원회(제4장), 대회참가(제5장) 등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마. 선수등록규정

- 선수등록규정은 전체 5장 24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우리나라 체육의 균형 발전을 꾀하고 건전하고 효율적인 선수육성을 도모하기 위해 본회에 가맹된 경기단체의 선수등록 및 선수활동 등에 관한 절차와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이 규정은 선수자격심의위원회(제2장), 선수등록(제3장), 선수활동(제4장), 분쟁해결(제6장) 등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바. 법제상벌위원회 규정

- 법제상벌위원회 규정은 전체 4장 25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한체육회에서 제정·개정하는 각종 규정의 효율적 관리를 통하여 합리적 운영을 도모하고 정관 제65조에 의하여 체육계의 공적에 대한 표창이나 비위 사실에 대해 징계함으로써 건전한 체육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본 위원회를 운영한다고 규정 제정 목적을 명시하고 있음
- 이 규정은 본 위원회의 심의 대상(제7조), 표창(제3장), 징계(제4장) 등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2) 대한올림픽위원회 주요규정

가. 규정

- 대한올림픽위원회 규정은 1947년 제정하여 전체 10장 30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올림픽 사업에 관하여 국제올림픽위원회(International Olympic Committee : 약칭 IOC)와 대외적 교섭을 갖는 유일한 단체로서 스포츠활동을 통하여 올림픽정신의 함양, 보급, 스포츠의 기조를 이루는 정신적, 신체적 자질의 발전도모와 국제친선, 세계평화 및 여성의 지위향상을 위한 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 이 규정은 목적 및 사업(제2장), 조직(제3장), 임원(제4장), 위원총회(제5장)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면서, 사무국을 대한체육회 사무처 내에 전담 사무부서를 두도록(제25조)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3) 국민체육진흥공단 주요 규정

가. 정관

- 국민체육진흥공단 정관은 1989년 제정하여 전체 6장 59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정관에서 국민체육진흥공단은 국민체육의 진흥, 스포츠경기수준의 향상 및 청소년육성과 관련한 사업을 지원하고, 서울올림픽대회를 기념하는 사업과 체육과학연구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기금을 조성·운용 및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공익법인이라는 점을 명시하고 있음
- 이 정관에서는 임원 및 직원(제2장), 이사회(제3장), 사업 및 기금의 조성·운영관리(제4장), 재산과 회계(제5장) 등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나. 국민체육진흥기금지원 규정

- 국민체육진흥기금지원규정은 1992년 제정하여 전체 4장 23조로 구상되어 있으며, 국민체육진흥법 제22조, 동법 시행령 제39조와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체육진흥기금관리·운용 지침에 따라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 국민체육진흥기금에서 보조 및 출연하는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명시하고 있음
- 이 규정에서는 기금사용신청 및 기금지원결정(제2장), 기금의 지원(제3장), 기금지원의 평가(제4장) 등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2. 문제점

1) 대한체육회 주요규정

가. 정관

□ 제2조(목적)

☞ 현황

- 본회는 체육운동을 범국민화하여 학교체육 및 생활체육의 진흥으로 국민의 체력향상과 건전하고 명량한 기풍을 진작시킴과 아울러 본회에 가맹한 경기단체를 지원육성하고 우수한 경기자를 양성하여 국위선양을 도모함으로써 민족문화 발전에 이바지하고 나아가 스포츠를 통한 국제친선과 세계평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문제점

- 우리나라 지방체육회의 경우 지방 체육발전의 거점조직으로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지방자치단체와 더불어 현재 우리나라 체육발전의 중심축이 되고 있음
 - 2007년 말 기준 전체 실업팀 890팀 중 지자체소속 504팀, 지방체육회·연맹소속 191팀
 - 지방체육회 예산 : 2007년 기준 약 3,280억원(대한체육회 1,052억원)
-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체육회의 정관에는 가맹경기단체와 더불어 대한체육회의 핵심축이라 할 수 있는 지방체육회 지원에 대한 근거가 불충분하여 지방 체육발전에 대한 대한체육회의 지원이 거의 없음. 이로 인해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체육회의 불만이 고조된 상태이기도 함
- 따라서 대한체육회 정관에서 지방체육회를 대한체육회의 핵심축 즉, 가맹체육단체로 인정하고 지방체육회에 대한 지원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 제4조(사업) 제4호, 제5호

☞ 현황

-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 5. 올림픽경기, 아시아경기, 국제대학생경기 및 이에 준하는 국제적 종합경기
기에 관한 사업
 - 6. 스포츠의 국제교류

☞ 문제점

- NOC에서 관장하는 주요 업무를 대한체육회 목적 사업으로 명확히 하는 것은 조직간 업무 중복이라 할 수 있으며, 대한체육회가 사업을 수행할 경우는 KOC의 협조가 있을 경우 올림픽경기, 아시아경기에 관여하는 방향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스포츠의 국제교류도 KOC가 직접 수행하지 않는 국제교류로 한정하여 추진하도록 해야 두 조직간의 업무 영역이 명확해 짐

□ 제11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제1항 이사 및 대의원

☞ 현황

- ① 본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 이 사 20인 이상 47인 이내(회장, 부회장, 사무총장 포함)
 - 대의원 각 가맹경기단체별 1인

☞ 문제점

- 체육회의 현재 이사수는 30명이나, 이사의 역할이 과하고 이사 자격이 불문명하여 이사회를 통한 조직 운영에 한계가 있으며, 여성체육인들의 이사회참여가 제도적으로 막혀있지는 않지만 최소기준이 설정되지 않아 여성체육인의 의견 반영이 제도적으로 부족한 상태라 할 수 있으며,

- 국가대표 양성의 중요한 역할을 하는 선수촌장이 당연직 이사에 포함되지 않고,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과 같이 일상적으로 사무처 운영에 관여하는 임원들이 당연직 이사로 과다 참여하는 것은 이사회를 통한 사무처 견제 등이 불가능하도록 구조화 되어 있음
- 또한 대의원수를 회원수에 상관없이 가맹경기단체별 1인으로 하는 것은 표의 등가성에 문제가 있으며, 지방체육회를 대한체육회 의사결정에서 배제하는 것은 지역체육발전에 공헌하는 지방체육회의 역할을 무시하거나 지방체육인의 의사를 체육회 운영에 반영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참여 민주주의 원칙에 위배

□ 제12조(임원의 임기) 제1항

☞ 현황

- ① 이사의 임기는 4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그러나 제13조제3항에서 정하는 당연직이사의 임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95. 3. 14)

☞ 문제점

- 이사의 임기가 4년으로 설정되어 있는 것은 올림픽 등 주요 국제종합대회가 4년을 주기로 실시됨으로 인해 이사가 국제종합대회에 기여하도록 하는 측면이 배려되어 있으나 이사 임기 4년 보장은 조직운영에 있어서 미래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어려울 수 있음

□ 제13조(임원의 선출 방법) 제3항

☞ 현황

- ③ 선임임원에는 시·도지부장이 추천한 7인내지 16인의 시·도대표와 임원 정수의 5분의 1범위내의 체육관련단체의 장이 당연직이사로 포함되어야 한다. 이에 대한 당연직이사 선출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 문제점

- 지방체육회와 가맹경기단체를 당연직 이사로 참여시켜 체육회 운영에 지방체육회 및 가맹경기단체의 현장 목소리를 반영토록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이사회는 현장 목소리에 대한 참여가 제한적인 면이 있으며, 또한 이사 자격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이사회 구성의 민주성 및 투명성이 제도적으로 보장되지 못함
- 체육회의 최고결정기관은 대의원총회임에 불구하고 이사회에 권한이 과다 집중되어 있으며, 이사 인원수가 많아 회의 진행에 비효율성을 띠는 등의 비판의 소리가 높기도 함
- 현재 여성체육인들의 이사 참여가 제도적으로 막혀있지는 않지만 최소기준이 설정되지 않아 여성 체육인의 의견 반영이 제도적으로 부족한 상태라 할 수 있음
- 또한 국가대표 양성의 중요한 역할을 하는 선수촌장이 당연직 이사에 포함되지 않고,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 등 일상적으로 사무처 운영에 관여하는 임원들이 당연 이사로 참여함으로써 이사회를 통한 사무처 견제가 불가능하도록 구조화 됨

□ 제13조의 2(임원의 사임) 제1항

☞ 현황

- ① 개인적인 사정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임원이 사임하고자 할 경우에는 즉시 회장에게 사임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 문제점

- 회장의 사임서 제출에 대한 규정과 제출처 명시가 안 되었으며, 사임원 효력 여부가 불분명하여 조직운영의 혼란이 가중될 수 있는 문제점이 노출될 가능성이 있음
- 따라서 회장 사임원의 경우 감독기관에 제출토록하고, 부득이하게 사무처

에 제출한 경우 사무처는 사임원 접수 즉시 감독기관에 통보하도록 하여 조직의 안정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음

□ 제14조(회장의 선출) 제1항

☞ 현황

- ① 회장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회장후보자 등록신청서를 총회 5일전까지 사무처에 제출하여 후보자 등록을 하여야 하며, 사무처는 총회 4일전까지 후보자 등록 공고를 한다.
- ② 회장후보자는 학식과 덕망,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국내체육진흥과 올림픽 운동에 크게 기여하였거나, 기여할 수 있는 자 이어야 한다.

☞ 문제점

- 회장 입후보자가 선거일 5일전까지 사무처에 제출하여 후보자 등록을 하도록 하는 것은 사전 선거를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등록 후 충분한 선거활동을 할 수 있도록 기간을 조정할 필요가 있음
- 현재 규정에 의하면 학식과 덕망, 경험이 풍부한 자면 국내체육진흥과 올림픽운동에 크게 기여하지 않았어도 미래에 기여하기 위해 출마가 가능하다는 논리가 되는 등 지극히 추상적임
- 따라서 체육회장 후보자격을 그 동안 국가 체육발전을 위해 일해 온 경력을 가진 자 중에서 선출하도록 후보 자격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제27조 이사회 구성

☞ 현황

-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및 이사로 구성하며, 본회의 최고집행기관이다.

☞ 문제점

- 이사회에 회장이 임명한 부회장이 전원 포함되는 것은 이사회를 통하여 회장의 전횡이 합리화 될 수 있으며, 이사회가 체육회의 최고집행기관이 되는 것은 이사회가 집행기관인 사무처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되는 바, 이사회가 최고집행기관이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 또한 체육회의 최고의결기관은 대의원 총회인바 이사회가 가진 일부 권한 중 체육회 전체에 미치는 중요 사항 및 기본 계획 등에 대해서는 결정권을 총회에서 처리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일 것임

□ 제32조의2(KOC임원의 발언권)

☞ 현황

- 정관 제33조 규정에 의해 설치된 KOC의 명예총무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응답할 수 있다.

☞ 문제점

- KOC의 명예총무가 체육회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토록 하는 것은 일면 바람직한 것으로 보이나, 상호 별개의 조직인 KOC의 명예총무에 대한 출석 등을 체육회 정관에 명시하는 것은 바람직한 규정이라 할 수 없음

□ 제 6 장 대한올림픽위원회

☞ 문제점

- 체육회 정관에서 국제기구의 한국지부인 대한올림픽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은 조직의 독립적 운영을 권장하는 올림픽헌장에 불부합함

□ 제37조(생활체육위원회의 설치)

☞ 현황

- 본회에 제4조제9호의 사업에 관한 사항을 조사, 연구, 심의하고 이사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생활체육위원회를 둔다.

☞ 문제점

- 기능적으로 국민생활체육협의회 고유 업무와 중복되는 생활체육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생활체육 비전문기관인 체육회에 생활체육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것은 단체간 기능 중복을 유발하는 원인으로 작용함

□ 제65조(표창 및 징계)

☞ 현황

- 본회는 체육계에 공적이 있는 단체 및 개인을 표창하고 비위가 있는 단체 및 개인을 징계하는 권한을 가진다.

☞ 문제점

- 체육회가 체육계 전체에 대해 징계권을 갖는 것은 일종의 초법적 월권이 라 할 수 있으며, 징계에 대한 범위와 대상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나. 가맹경기단체 규정

□ 제9조(임원의 종류 및 정수) 제1항 각호

☞ 현황

- ① 경기단체는 다음의 임원을 둘 수 있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본회의 승인을 얻어 이사를 증원할 수 있다.
1. 선임임원 : 회장 1인 · 부회장 약간인 · 전무이사 1인을 포함한 이사 28인 이내, 감사 2인
 2. 대 의 원 : 지부 및 전국규모연맹체별 1인과 중앙대의원 약간인
 3. 위촉임원 : 고문 약간인, 참여 약간인, 위원 약간인

☞ 문제점

- 가맹경기단체 수준에서 이사의 수 28인은 너무 많은 점이 있으므로 이사수를 소수정예화하여 조직운영에 관한 의사결정을 신속하게 처리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중앙대의원제도는 자칫 회장의 전횡을 합리화 할 수 있으므로 제16조 제3항의 자격을 갖춘 사람을 중앙대의원으로 선출하기 보다는 이사에 포함시켜 조직운영에 기여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 참여 및 위원제도는 특별한 역할이 없음을 감안하여 폐지가 바람직함

다. 시도지부 규정

□ 제10조(임원선임) 제2항, 제3항

☞ 현황

- ② 시·도체육회장에는 도지사(시장), 부회장중 1인은 교육감 또는 부교육감을 각각 당연직으로 추대하여야 한다.
- ③ 회장, 부회장, 사무처장은 집행부의 당연직 이사이다.

☞ 문제점

- 이 규정에 따라 시도지사의 시도체육회장 당연직화는 지방체육발전을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투자가 필요한 시기에는 당연한 결과라 할 수 있으나 지방자치 실시 이후 단체장들이 정치적으로 선출됨으로 인해 체육단체가 정치적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상존함
- 단체장이 회장을 겸임하므로 인해 체육회가 문제를 유발할 경우 감독기관인 자치단체에서 단체장의 사전 승인 없이 사무감사 등을 실시할 수 없어 체육회에 대한 견제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문제점이 나타나기도 함
- 따라서 지방체육회장의 자치단체장 당연직을 폐지하고 일정한 절차를 거쳐 선출하도록 하여 단체장 당연직화에 의한 부작용을 막고, 지방체육인들이 원하는 자를 회장으로 선출하여 체육조직의 자치화를 유도할 필요가 있음
- 또한 회장, 부회장, 사무처장 등 사무처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모든 집행부가 당연직 이사로 참여하는 것은 이사회를 통한 사무처 견제기능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라. 전국체육대회 규정

□ 제19조(개최지 결정) 제1항, 제3항

☞ 현황

- ① 개최지는 신청 시도지부의 유치신청서류를 기준으로 전국체육대회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5년 전까지 이사회가 최종결정한다.
- ③ 본회는 개최지를 결정, 승인한 후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 문제점

- 전국체전은 대한체육회의 주관사업이긴 하나 실제로는 중앙정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시설설치 및 행사비 보조를 함
- 또한 행사준비는 유치 지방자치단체가 기획단 등을 구성하여 준비함. 즉, 전국체전은 대회를 유치한 지방자치단체와 해당 자치단체의 체육회 및 중앙정부가 연합하여 치르는 국가대회임
- 따라서 전국체전 개최지 후보지역 추천권을 시도지사협의회에 위임하거나 시설설치 등에 대한 재정지원을 담당하는 정부로 환수하여 지방의 재정구조나 시설 보유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2) 대한올림픽위원회 주요규정

가. 대한올림픽위원회 규정

□ 제5조(조직) 제1항

☞ 현황

①본위원회는 다음의 위원으로 조직한다.

1.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제올림픽위원회 위원
2. 올림픽 및 아시아경기대회 종목에 해당하는 경기단체로서, 대한체육회 및 당해 종목의 국제경기연맹에 가입한 경기단체가 회장단 중에서 선출한 각 1인의 위원
3. 대한체육회 회장 및 사무총장

☞ 문제점

- IOC 헌장 제29조의 NOC의 구성에 따르면 NOC는 올림픽 종목에 해당하는 국제연맹에 가입된 국가 내 모든 경기연맹이나 그 대표자나 올림픽에 참여해 온 현·전직 선수들, 올림픽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IOC 인정 종목의 국제연맹에 가입된 국가 내 모든 경기연맹이나 그 대표자로 구성하게 되어 있음. 그러나 이 정관에는 아시아경기대회 종목에 해당하는 경기단체까지 포함하도록 하고 있어 IOC 규정에 상충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 규정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 또한 대한체육회장이나 체육회 사무총장을 모두 당연직 위원으로 명시하는 것은 두 조직간의 상호 정보교류차원에서 일면 바람직하다 할 수 있으나 회장이 임명하는 사무총장은 체육회의 사무처를 관장한 직위인데, 그 직위를 이용하여 대한올림픽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함

□ 제6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 현황

- 본위원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명예위원장 1인

위원장 1인

고문 약간인

부위원장 약간인

총무 1인

상임위원 20인 이상 30인 이내(총무 포함)

감사 2인

☞ 문제점

- 부위원장 약간 명에 대한 근거가 불확실하여 부위원장 수를 명확히 규정하여 조직운영의 사적 감정 이입 방지할 필요가 있으며, 상임위원 수가 20인 이상 30인 이내로 전체위원 40인에 비해 너무 많아 이에 대한 적정수 규정이 필요함
- 또한 총무는 사무처 운영을 책임지는 직위로서 직접 상임위원에 포함되는 것보다는 상임위원회 간사로 역할을 수행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각 선출임원에 여성비율을 명시하지 않아 여성참여가 소외될 가능성 있음

□ 제9조 (임원의 선출 방법) 제2호, 제7호

☞ 현황

- 위원장은 위원총회에서 대한체육회 회장을 추천 선임한다.
- 제5조 제1항 제4호에 의한 위원 중 결원이 있을 때에는 상임위원회의의 의결로써 보선하고, 그 결과를 차기 위원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문제점

- 대한체육회장을 당연시 하여 추천 선임하는 것은 올림픽헌장과 불부합하며, 신규위원에 대한 선임을 상임위원회에서 한다는 것은 위원총회의 기능을 약화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임원 선임에 관한 모든 권한은 위원총회에 부여하여 위원총회의 권위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제25조 사무국

☞ 현황

- 본위원회의 사무집행을 위하여 대한체육회 사무처 내에 전담 사무부서를 둔다.

☞ 문제점

- 국제기구의 국내 지부를 대한체육회 사무처 내에 두는 것은 조직위상으로도 맞지 않으며, 올림픽헌장에도 불부합하는 문제가 발생함

3) 국민체육진흥공단 주요 규정

가. 국민체육진흥기금지원 규정

□ 제7조 (기금사용대상자 및 지원신청) 제1항 제2항

☞ 현황

① 국민체육진흥법 제22조제1항 및 공단 정관 제33조의 사업을 위하여 기금을 보조 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문화체육관광부가 직접 관장하는 체육관련 법인
2.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3. 초·중등 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학교
4.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특별히 인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
5. 그 밖에 공단 이사장이 국민체육진흥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고 인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등

☞ 문제점

- IOC 종식종목 및 인정종목 경기단체와 아시아경기 정식종목 경기단체들에 대해서 기금사용대상자로 구체화되지 못했으며, 법인 경기단체가 독립된 법인임에도 불구하고 기금지원 직접 신청대상자 여부가 불확실함

☞ 현황

② 제1항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기금사용대상자중 사업 수행을 위해 공단으로부터 기금을 보조받고자 하는 자(이하 "보조사업자"라 한다)는 매년 보조받고자 하는 사업의 목적과 내용, 사업수행에 소요되는 경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1호의 보조금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문제점

-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법인 체육단체는 자체 법인격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가맹기관에 의해 기금 지원신청을 하는 것은 법인 자체의 경쟁력 약화 요인이자 법인격으로서의 의무 역할을 방기하는 행태임
- 이러한 모호성에 의하여 법인 경기단체가 자체 회계능력을 향상시킬 기회를 박탈하게 되고, 상위기관에 대한 의존성과 행정절차의 중복성이 심화되어 나타남. 이는 정부의 규제완화 및 권한이양 방침과도 상반됨

IV. 체육단체 관련 규정 선진화 방안

1. 대한체육회 주요 규정

가. 정관

□ 제2조(목적)

제2조(목적) 본회는 체육운동을 범국민화하여 학교체육 및 생활체육의 진흥으로 국민의 체력향상과 건전하고 명량한 기풍을 진작시킴과 아울러 본회에 가맹한 경기단체를 지원육성하고 우수한 경기자를 양성하여 국위선양을 도모함으로써 민족문화 발전에 이바지하고 나아가 스포츠를 통한 국제친선과 세계평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00. 12. 5)

☞ 개정의 필요성

- 우리나라 지방체육회의 경우 지방 체육발전의 거점조직으로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지방자치단체와 더불어 현재 우리나라 체육발전의 중심축이 되고 있음
 - 전체 실업팀 890개 중 지자체소속 504개팀, 지방체육회·연맹소속 191개팀(2007년 기준)
 - 지방체육회 예산 : 2007년 기준 약 3,280억원(대한체육회 1,052억원)
-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체육회의 정관에는 가맹경기단체와 더불어 대한체육회의 핵심축이라 할 수 있는 지방체육회 지원에 대한 근거가 불충분하여 지방 체육발전에 대한 대한체육회의 지원이 거의 없음. 이로 인해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체육회의 불만이 고조된 상태이기도 함
- 따라서 대한체육회 정관에서 지방체육회를 대한체육회의 핵심축 즉, 가맹체육단체로 인정하고 지방체육회 지원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 개선 방향

- 목적 조항에 지방자치단체체육회에 대한 지원육성을 명문화하도록 함

☞ 개정안

-아울러 본회에 가맹한 경기단체와 지방자치단체 체육회를 지원육성하고.....

□ 제3조(주소)

제3조(주소) 본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송파구 방이동 88번지에 두고 각 시·도(해외지부 포함)에 지부를 둔다.(개정 '90. 4. 13)

☞ 개정안

- 88번지에 둔다.

☞ 개정 사유

- 지방체육회가 체육회의 가맹조직으로 됨으로 인해 조문 수정

□ 제4조(사업)

제4조(사업)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전반적 체육운동에 관한 기본방침의 심의결정
2. 체육운동의 아마츄어정신 확립
3. 각 가맹경기단체와 지부의 지원육성(개정 '00. 12. 5)
4. 전반적 체육운동에 관한 정부자문에 응하고 정부 기타 관계기관에 대한 건의
5. 올림픽경기, 아시아경기, 국제대학생경기 및 이에 준하는 국제적 종합경기에 관한 사업
6. 스포츠의 국제교류

7. 전국체육대회 및 전국소년체육대회등 각종 종합체육대회의 개최(개정 '94. 3. 16)
8. 학생의 보건 및 체력향상에 관한 조사연구와 체육의 육성
9. 국민체력향상에 관한 조사연구 및 국민체육의 육성보급
10. 경기기술의 연구 및 향상
11. 과학적 방법에 의한 경기자 및 경기지도자의 양성
12. 체육 및 경기시설의 설치관리와 용기구에 관한 연구개발
13. 체육운동에 관한 자료수집과 조사
14. 체육운동에 관한 선전계몽
15. 체육운동에 관한 각종 간행물의 발간
16. 본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본회회관의 임대사업, 수영장, 스케이트장 및 기타 훈련시설의 일반공개사업(개정 '89. 6. 21)
17.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수익사업

☞ 개정의 필요성

- KOC와 업무가 분리 독립됨에 따라 NOC에서 관장하는 주요 국제대회는 KOC의 고유 업무로 설정하고 대한체육회에서는 KOC의 협조가 있을 경우 올림픽경기, 아시아경기에 관여하는 방향으로 이 정관의 사업조항 수정 필요
- 또한 스포츠의 국제교류도 KOC가 직접 수행하지 않는 국제교류로 한정하여 추진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개선 방향

- 올림픽경기, 아시아경기 정식 종목 이외의 국제경기 교류로 한정
- KOC가 관장하지 않는 스포츠 국제교류로 한정

☞ 개정안

- 제4조(사업) ①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 5. 올림픽경기, 아시아경기 공식종목을 제외한 국제경기에 관한 사업
- 6. KOC가 관장하지 않는 스포츠의 국제교류에 관한 사업
- ② 본회가 제1항 제5호와 제6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올림픽경기, 아시아경기 및 국제올림픽위원회가 후원하는 각종 국제 경기대회에 관한 사업과 스포츠의 국제교류에 관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경우에는 대한올림픽위원회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한다(신설).

□ 제6조(조직가맹)

제6조(조직가맹) ① 본회는 본회가 가맹을 인정하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종목별 아마투어 경기단체로써 조직한다.(개정 '91. 4. 6)

☞ 개정의 필요성

- 현재 체육회의 두 중심축은 56개 가맹경기단체(준가맹단체 포함)와 각 지방자치단체에 지부 형식으로 결성되어 운영되고 있는 지방체육회임. 그러나 가맹경기단체는 정관에 의하여 체육회의 조직으로 인정되어 있으나, 지방체육회는 지부로만 규정되어 권리와 의무행사가 불분명함
- 따라서 지방 체육발전과 우수선수 발굴 및 은퇴 체육인의 연결 통로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지방체육회를 대한체육회의 공식 조직(가맹체육단체)로 인정하여 일정한 권한과 권리 및 의무를 행사토록 하는 것이 필요함

☞ 개선 방향

- 지방체육회를 가맹 체육단체로 인정하고 제7조의 회장선거, 발언권, 소청 등의 권한을 부여토록 함

☞ 개정안

제6조(조직가맹) ① 본회는 본회가 가맹을 인정하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종목별 아마츄어 경기단체(이하 “가맹경기단체”라 한다)와 지방자치단체 체육회(이하 “지방체육회”라 한다)로 조직한다.

□ 제7조(가맹경기단체의 권리)

제7조(가맹경기단체의 권리) 가맹경기단체는 본회에 대하여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권리를 가진다.

☞ 개정안

- 제7조(가맹단체의 권리) 가맹단체는 본회에 대하여

☞ 개정 사유

- 지방체육회가 체육회의 가맹조직으로 됨으로 인해 조문 수정

1. 총회에 대의원을 파견하여 발언권 및 의결권을 가진다.
2. 본회에 대하여 건의 및 소청할 수 있다.
3. 본회가 주최, 주관 및 승인하는 사업에 참가할 수 있다.(개정 '91. 4. 6)
4. 본회가 승인하는 사업을 주최, 주관, 후원할 수 있다.(개정 '91. 4. 6)
5. 가맹경기단체의 목적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본회에 국고보조금 또는 서울 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 지원금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91. 4. 6)

☞ 개정의 필요성

- 가맹경기단체는 민법에 의한 법인격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상급기관에 기관의 목적사업 수행을 위해 지원금을 요청하는 것은 법인격의 고유 역할을 포기하는 것이자 기관의 자기 경쟁력을 약화하는 요인이 됨
- 또한 이러한 규정은 법인격을 가진 가맹경기단체를 상위기관에 대한 의

존성과 종속성을 심화시키며, 행정적으로는 절차의 중복성이 심화되어 나타나므로 이는 정부의 규제완화 및 권한이양 방침과도 상반됨

☞ 개선 방향

- 상급단체(대한체육회)를 통한 국고보조금 신청 폐지

☞ 개정안

- 5. 가맹경기단체의 목적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고보조금 또는 서울 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 지원금을 주무부처 및 해당기관에 직접 요청할 수 있다.

□ 제11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제11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① 본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선임임원

부 회 장 약간인

☞ 개정의 필요성

- 정관상 부회장의 역할이 거의 없음을 감안한다면 현재 10명인 부회장의 수는 많은 편이라 할 수 있음. 또한 약간인의 근거가 불확실하므로 적정수를 규정하고, 아울러 여성을 최소 1인 이상으로 명기하여 선임임원에서 여성체육인의 참여를 제도화 할 필요가 있음. 현재 체육회 부회장 10인 중 여성은 2명임

☞ 개선 방향

- 부회장을 5명 이내로 제한하고, 최소 1인을 여성계 당연 몫으로 조정
- 부회장 중 1인을 수석부회장으로 지정하여, 회장의 궐위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불가할 경우 권한을 대행토록 함

☞ 개정안

- 부회장 5인(여성부회장 1인 포함)

이 사 20인 이상 47인 이내(회장, 부회장, 사무총장 포함) (신설 '89. 6. 21)

☞ 개정의 필요성

- 체육회의 현재 이사수는 30명이나, 이사의 역할이 과하고 이사 자격이 불문명하여 이사회를 통한 조직 운영에 한계가 있으며, 여성체육인들의 이사참여가 제도적으로 막혀있지는 않지만 최소기준이 설정되지 않아 여성체육인의 의견 반영이 제도적으로 부족한 상태라 할 수 있음
- 또한 국가대표 양성의 중요한 역할을 하는 선수총장이 당연직 이사에 포함되지 않고,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과 같이 일상적으로 사무처 운영에 관여하는 임원들이 당연직 이사로 과다 참여하는 것은 이사회를 통한 사무처 견제 등이 불가능하도록 구조화 되어 있음으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 개선 방향

- 이사구성
 - 이사수를 15~20명 수준으로 축소하고 국내 IOC위원이 당연직 이사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체육회와 대한올림픽위원회 사업 공유 모색
 - 선수총장을 당연직 이사 추대, 사무총장은 이사가 아니라 이사회 간사로 참여하게 하고 보고 및 발언권 부여(이사회 요청시로 한함)
 - 수석부회장을 제외한 부회장은 이사 참여 배제
 - 여성계에 이사 30% 우선 할당하여 체육계의 여성참여 확대 유도
- 이사역할 : 제28조 수정 참조

☞ 개정안

- 이 사 : 15~20인 이내(회장, 수석부회장, 선수총장 포함)

- 세부 내용은 제13조 선임임원의 선출방법 제3항 참조

2. 대의원 각 가맹경기단체별 1인(신설 '89. 6. 21)

☞ 개정의 필요성

- 대의원수를 회원수에 상관없이 가맹경기단체별 1인으로 하는 것은 표의 등가성에 문제가 있으며, 지방체육회를 대한체육회 의사결정에서 배제하는 것은 지역체육발전에 공헌하는 지방체육회의 역할을 무시하거나 지방체육인의 의사를 체육회 운영에 반영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참여민주주의 원칙에 위배
- 따라서 회원수의 규모에 따라서 대의원 권한을 재조정하고, 지방체육회를 대의원에 포함하여 지방체육인의 의사를 체육회 직접 반영토록 함

☞ 개선 방향 : 총 정원 300명 이내 조정

- 지방체육회 100명
 - 지방자치단체 소속 체육회에 등록된 선수를 기준으로 최소 2인의 대의원을 배정하여 32명을 우선 배정하고, 나머지 68명은 등록선수 비율에 따라 대의원 수 배분
- 가맹경기단체 : 200명
 - 가맹경기단체당 2인의 대의원을 배정하여 116명을 우선 배정하고, 나머지 84명은 등록선수 비율에 따라 대의원 수 배정
- 지방체육회와 가맹경기단체의 대의원 수 비율을 1:2수준으로 설정하여 순수체육인의 모임인 가맹경기단체에 대한 권위 부여

☞ 개정안

- 대의원 200인 이내(지방체육회 100명, 가맹경기단체 200명)

3. 위촉임원

명예회장 1인(신설 '89. 6. 21)

고 문 약간인

참 여 약간인

위 원 규정에 정한 인원(개정 '89. 6. 21)

- ② 전항의 부회장 중에서 필요에 따라 상근부회장 1인을 둘 수 있다.(개정 '89. 6. 21)

☞ 개정의 필요성

- 명예회장을 긍정적으로 운영할 경우 그동안 체육회 발전을 위해 공헌한 사람을 위촉하여 대외활동을 유도할 수 있으나, 공공기관에서 명예회장을 두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고문으로 위촉하여도 명예회장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참여 제도의 경우 명칭자체와 역할이 불분명하며 참여 위촉임원을 두는 것은 회장이 제도를 악용할 경우 불필요한 오해를 살 가능성도 있으므로 제도 자체를 폐지할 필요가 있음

☞ 개정안

- 명예회장 및 참여위원 폐지
- 상근부회장을 수석부회장으로 변경

□ 제12조(임원의 임기)

제12조(임원의 임기) ① 이사의 임기는 4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그러나 제13조제3항에서 정하는 당연직이사의 임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95. 3. 14)

☞ 개정의 필요성

- 이사의 임기가 4년으로 설정되어 있는 것은 올림픽 등 주요 국제종합대회가 4년을 주기로 실시됨으로 이해 이사가 국제종합대회에 기여하도록 하

는 측면이 배려되어 있으나 이사 임기 4년 보장은 조직운영에 있어서 미래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어려울 수 있음

- 따라서 급속히 변화하는 체육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이사의 임기를 2년으로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사 임기의 연임제한 규정이 없음으로 유능한 이사의 경우는 연임이 가능하여 국제종합대회에도 충분히 기여할 수 있을 것임

☞ 개선 방향

- 이사의 임기 2년으로 단축

☞ 개정안

제12조(임원의 임기) ①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그러나 제13조 제3항에서 정하는 당연직이사의 임기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 ② 임기의 기산은 일수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정기총회를 기준으로 하며, 임원은 연임할 수 있다.

☞ 개정의 필요성

- 또한 조직은 정기총회를 통하여 조직운영에 대한 점검 및 미래 방향설정을 추구하고, 그 방향에 적합한 인물을 임원진으로 선임하여 집행체계를 구축하여야 하나, 임원임기 기산일이 불분명하여 정기총회가 열리지 않았을 경우 임기기간이 적용되지 않아 각종 부작용(의사결정 등)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음

☞ 개선 방향

- 정기총회 일을 명기(예 2월 셋째주 목요일 등)하고 2년 임기 만료일 이후 자동 자격상신토록 함

☞ 개정안

② 임기의 기산은 정기총회를 기준으로 하며, 임원은 연임할 수 있다.

⑤ 임원은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자가 취임하기까지는 그 직무를 집행하여야 한다.

☞ 개정의 필요성

- 임원은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자가 취임하기까지는 그 직무를 집행하도록 하는 현 규정은 임기 만료자가 후임자의 역할을 수행토록 하고 있어 중요사항에 대해 결정시 책임성이 불투명할 것임
- 또한 후임자 취임 이전의 업무 공백이 우려된다면 권한 대행을 지정하여 조직의 연속성을 띠게 하면 될 것임. 따라서 임기 만료시에는 권한도 만료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차순위자가 권한 대행토록 명시할 필요가 있음

☞ 개선 방향

- 임기만료일 이후 전임자 모든 업무 참여 불가
- 후임자 취임이전엔 권한대행자 지정 명문화

☞ 개정안

⑤ 임원의 임기가 만료된 후에도 후임자가 취임하지 못하였을 경우 그 직무 대행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회장 대행 : 수석부회장
2. 수석부회장 대행 : 부회장 중 연장자 순
3. 감사 대행 : 재정 감사에 한해 필요시 외부 기관에 위임
4. 1호 내지 3호 외의 그 밖의 임원 대행 : 없음

□ 제13조(선임임원의 선출방법)

- 제13조(선임임원의 선출방법) ① 회장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임하되, 회장은 이
정관 제14조에 의하여 선출한다.
- ② 부회장 및 이사는 총회에서 선임하되, 상근부회장, 사무총장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임명한다.

☞ 개정의 필요성(문제점)

- 상근부회장의 역할이 불분명하고, 사무총장이 사무처의 업무를 총괄하므로 상
근부회제가 불필요하며, 회장 궐위 또는 사고로 직무수행이 곤란한 경우 권
한대행 서열을 정하기 위해서 수석부회장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
- 선수총장에 대한 임명도 사무총장과 같이 임원선출규정에 포함할 필요가
있음

☞ 개선 방향

- 상근부회장을 수석부회장으로 명칭변경
- 선수총장을 임명 절차 임원선출규정에 포함

☞ 개정안

- ② 부회장 및 이사는 총회에서 선임하되, 수석부회장, 사무총장, 선수총장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임명한다
- ③ 선임임원에는 시·도지부장이 추천한 7인내지 16인의 시·도대표와 임원정
수의 5분의 1범위내의 체육관련단체의 장이 당연직이사로 포함되어야 한다.
이에 대한 당연직이사 선출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개정 '00. 12. 5)

☞ 개정의 필요성

- 지방체육회와 가맹경기단체를 당연직 이사로 참여시켜 체육회 운영에 지
방체육회 및 가맹경기단체의 현장 목소리를 반영토록 해야 함에도 불구하
고 현재의 이사회는 현장 목소리에 대한 참여가 제한적인 면이 있으며,

또한 이사 자격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이사회 구성의 민주성 및 투명성이 제도적으로 보장되지 못함

- 체육회의 최고의결기관은 대의원총회임에 불구하고 이사회에 권한이 과다 집중되어 있으며, 이사 인원수가 많아 회의 진행에 비효율성을 띠는 등의 비판의 소리가 높기도 함
- 현재 여성체육인들의 이사 참여가 제도적으로 막혀있지는 않지만 최소기준이 설정되지 않아 여성 체육인의 의견 반영이 제도적으로 부족한 상태라 할 수 있음
- 또한 국가대표 양성의 중요한 역할을 하는 선수총장이 당연직 이사에 포함되지 않고,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 등 일상적으로 사무처 운영에 관여하는 임원들이 당연 이사로 참여함으로써 이사회를 통한 사무처 견제가 불가능하도록 구조화 됨

☞ 개선 방향

- 기본 방향
 - 이사수를 15~20명 이내로 축소하고 국내 IOC위원이 당연직 이사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체육회와 대한올림픽위원회 사업 공유 모색
 - 선수총장을 당연직 이사 추대, 사무총장은 이사가 아니라 이사회 간사로 참여하게 하고 이사회 요청시에 한하여 발언권 부여
 - 수석부회장을 제외한 부회장은 이사 참여 배제
 - 여성계에 이사 30% 우선 할당하여 체육계의 여성참여 확대 유도
- 이사 구성 방안
 1. 추천 이사 : 5인
 - 시·도체육회 추천 1인(지방체육회를 대표하여 시도체육회에서 추천)
 - 가맹경기단체 추천 1인
 - 국민체육진흥공단 추천 1인

- 대한장애인체육회 추천 1인
- 소관 주무부처 추천 1인

2. 당연 이사 : 4~8인

- 대한체육회장, 수석부회장, 선수총장
- 한국체육학회
- 국제올림픽위원회 대한민국 국적 위원 전원

3. 선출 이사 : 7인 이내

- 선수출신으로 국가대표 경력이 5년 이상인 자 2인 이상(1인은 여성)
- 지도자 출신으로 국가대표 감독 경력이 5년 이상인 자
- 변호사, 회계사 등 해당분야 경력 10년 이상인 자
- 국민체육진흥에 공헌한 공적이 있는 자

☞ 개정안

③ 선임임원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이사로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천 이사

- 시·도체육회 추천 1인(지방체육회를 대표하여 시도체육회에서 추천)
- 가맹경기단체 추천 1인
- 국민체육진흥공단 추천 1인
- 대한장애인체육회 추천 1인
- 소관 주무부처 추천 1인

2. 당연 이사

- 대한체육회장, 수석부회장, 선수총장
- 한국체육학회
- 국제올림픽위원회 대한민국 국적 위원

3. 선출 이사 7인 이내

- 선수출신으로 국가대표 경력이 5년 이상인 자 2인 이상(1인은 여성)
- 지도자 출신으로 국가대표 감독 경력이 5년 이상인 자
- 변호사, 회계사 등 해당분야 경력 10년 이상인 자
- 국민체육진흥에 공헌한 공적이 있는 자

④ 회장, 감사를 제외한 부회장, 이사의 결원이 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이를 보선할 수 있으며, 차기총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 개정의 필요성

- 이사회는 대의원총회에서 위임하는 것을 처리하는 기관으로서의 위상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이사를 이사회에서 보선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함. 또한 회장, 감사, 부회장, 이사 선출은 제13조 제1항, 제2항에서 대의원총회에서 선출하도록 이미 명문화되어 있음

☞ 개선 방향

- 이사회에서 보선하도록 하는 규정 폐지

☞ 개정안

-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추천 이사와 당연 이사는 총회에서 선임된 것으로 본다. 다만 추천 이사가 직무에 충실하지 않을 경우 회장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추천기관에 이사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⑥ 임원의 취임은 주무부처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전문개정 '94. 3. 16)

☞ 개정의 필요성

- 이 규정에 의하면 모든 임원의 취임은 주무부처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으로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 제6항에 규정된 바에 따라 회장의 경우에만 주무부처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개정할 필요가 있음

☞ 개선 방향

- 회장에 한해 주무부처 승인 사항으로 규정

☞ 개정안

- 회장의 취임은 주무부처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13조의 2(임원의 사임)

제13조의 2(임원의 사임) ① 개인적인 사정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임원이 사임하고자 할 경우에는 즉시 회장에게 사임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 개정의 필요성

- 회장의 사임서 제출에 대한 규정과 제출처 명시가 안 되었으며, 사임원 효력 여부가 불분명하여 조직운영의 혼란이 가중될 수 있는 문제점이 노출될 가능성이 있음
- 따라서 회장 사임원의 경우 감독기관에 제출토록하고, 부득이하게 사무처에 제출한 경우 사무처는 사임원 접수 즉시 감독기관에 통보하도록 하여 조직의 안정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음. 즉 회장사임서 제출처를 최상위 감독기관이 정부부처에 제출토록 명확히 하고, 사임원 제출시부터 회장 권한을 상실토록 하여 신속한 조직운영체계를 정비하고자 함

☞ 개선 방향

- 회장 사임원 제출 명기

☞ 개정안

- ① 개인적인 사정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임원이 사임하고자 할 경우에는 즉시 회장에게 사임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단 회장이 사임하고자 할 경우는 주무부처 장관에게 사임원을 제출하여야 하며 부득이

하게 사무처에 제출하였을 경우, 사무총장은 즉시 주무부처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을 당연히 사임한 것으로 본다.
1. 정관 제17조의 3이 정하는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
 2. 정관 제13조 제3항에서 정하는 당연직 이사의 경우 그 해당직위를 상실한 때
 3. 특별한 사유없이 연속 3회 이상 이사회에 불참하거나 2년간 본회주최행사에 참여하지 아니한 때

☞ 개정의 필요성

- 2년간 본회주최행사에 참여하지 아니한 때의 행사 종류가 불분명하여 사임처리를 두고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크므로 이에 주최행사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위의 조문 경우 2년에 한번의 참여로도 면책이 될 수 있으므로 참여를 출석율로 변경하고 30% 미만 출석율에 대해서는 당연 사직토록 규정함

☞ 개선 방향

- 참여행사 범위 명확화

☞ 개선안

- 3. 특별한 사유없이 연속 3회 이상 이사회에 불참하거나 본회가 주최한 전국단위 행사나 사무처의 참석요청 행사에 대하여 연간 참석율이 30% 미만일 때

□ 제14조(회장선출방법)

제14조(회장선출방법) ① 회장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회장후보자 등록신청서를 총회 5일전까지 사무처에 제출하여 후보자 등록을 하여야 하며,

사무처는 총회 4일전까지 후보자 등록 공고를 한다. (전문개정 '02. 5. 16)

☞ 개정의 필요성

- 회장 입후보자가 선거일 5일전까지 사무처에 제출하여 후보자 등록을 하도록 하는 것은 사전 선거를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등록 후 충분한 선거활동을 할 수 있도록 기간을 조정할 필요가 있음

☞ 개선 방향

- 선거일 15일전까지 후보자 등록, 사무처는 14일전까지 등록 공고

☞ 개정안

- ① 회장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회장후보자 등록신청서를 총회 15일전까지 사무처에 제출하여 후보자 등록을 하여야 하며, 사무처는 총회 14일전까지 후보자 등록 공고를 한다.
- ② 회장후보자는 학식과 덕망,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국내체육진흥과 올림픽 운동에 크게 기여하였거나, 기여할 수 있는 자 이어야 한다.(전문개정 '02. 5. 16)

☞ 개정의 필요성

- 현재 규정에 의하면 학식과 덕망, 경험이 풍부한 자면 국내체육진흥과 올림픽운동에 크게 기여하지 않았어도 미래에 기여하기 위해 출마가 가능하다는 논리가 되는 등 지극히 추상적임
- 따라서 체육회장 후보자격을 그 동안 국가 체육발전을 위해 일해 온 경력을 가진 자 중에서 선출하도록 후보 자격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개선 방향

- 후보자격을 사전에 국가체육 발전을 위해 노력한 자로 명확히 하고자 함

☞ 개정안

- ② 회장후보자는 학식과 덕망,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국가 체육발전에 크게 기여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이어야 한다

□ 제15조(대의원의 선출방법)

제15조(대의원의 선출방법) ① 본회 가맹경기단체는 회장, 부회장중에서 1인의 대의원을 총회개최 5일전까지 해당 단체의 장이 서면으로 추천하여야 한다.

☞ 개정의 필요성

- 변경된 대의원 수에 맞게 본 조문을 전면 개정하고, 대의원의 범위를 회장, 부회장에서 임원으로 확대하여 대의원 참여 범위를 넓힘

☞ 개정안

- ① 본회 가맹경기단체와 지방체육회는 임원중에서 배정된 인원수만큼의 대의원을 총회개최 10일전까지 해당 단체의 장이 서면으로 추천하여야 한다.

□ 제15조의 2(위촉임원의 선출방법)

제15조의 2(위촉임원의 선출방법) ① 명예회장은 총회에서 추대한다.

- 명예회장제 폐지
- 11조 참조

- ② 고문 및 참여는 필요에 따라 둘 수 있되,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이를 위촉한다.

- 참여위원제 폐지
- 11조 참조

□ 제16조(임원의 직무)

제16조(임원의 직무)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에는 회장이 지명하는 부회장이 회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 개정의 필요성

- 회장이 지명하지 않고 유고될 경우는 직무대리에 대한 규정이 불분명하여 조직운영의 혼란이 가중될 수 있음으로 권한 대행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직무대리와 권한대행은 법률상 직수수행에 대한 책임과 한계가 다르므로 권한 대행으로 용어 수정

☞ 개선 방향

- 권한 대행권자 명확화 및 조문 내용 수정

☞ 개정안

-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의 결위 또는 사고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곤란할 경우에는 수석부회장이 회장의 권한을 대행한다. 단, 수석부회장의 결위 또는 사고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곤란할 경우에는 부회장 중 연장자 순으로 회장의 권한을 대행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를 조직하고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회의 직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다.

☞ 개정안

- ③ 이사는 이사회를 조직하고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회의 정관이 정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④ 명예회장은 이사회의 자문기관이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개선 방향

- 명예 회장제 폐지로 본 조문 삭제

- ⑤ 고문은 회장, 부회장의 자문기관이며, 참여는 이사회의 자문기관이다. 고문 및 참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개선 방향

- 참여제 폐지로 조문 수정

☞ 개정안

- ⑤ 고문은 회장, 부회장의 자문기관이며, 이사회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제17조의 3(임원의 결격사유)

제17조의 3(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본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 (신설 '94. 3. 16.)

1. 대한민국 국적을 갖지 아니한 자
2. 미성년자
3.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4.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개정의 필요성

- 선수의 인권 및 권익을 침해한 자나 선수에게 부적절한 행위로 징계 받은 경력이 있는 자에 대해서 체육회의 임원 진입을 제한토록 하여 체육회가 선수의 권익보호에 앞장서도록 할 필요성이 있음

☞ 개선 방향

- 선수의 인권 및 권익을 침해한 자 등에 대해 체육회 임원 취임 금지

☞ 개정안

- 7. 선수·지도자에 대한 인권 및 권익 침해, 부적절한 행위로 해당 경기단체로부터 징계를 당한 경력이 있는 자(신설)

□ 제19조(기능)

제19조(기능) 총회는 본회의 최고의결기관으로서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선출에 관한 사항
2.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의 승인
4. 사업계획 및 사업보고의 승인
5. 정관규정에 의해 대의원총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신설 '89. 6. 21)
6. 기타 중요사항

☞ 개정의 필요성

- 총회가 대한체육회의 최고 의결기관으로서 충분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체육회 및 가맹단체 운영 등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정토록하고 이사회는 총회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해서만 역할을 수행토록 이사회와 총회의 기능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정관 개정 및 제 규정의 제정은 대의원 총회의 고유권한으로 명확히 하여 이사회를 통한 임의적 개정을 방지토록 함

☞ 개선 방향

- 이사회의 기능 중 일부를 총회 기능으로 이관하여 기능 재조정
 - 가맹경기단체 및 지방체육회 지원에 관한 사항
 - 사무처 및 선수촌의 운영계획 승인

- 정관 개정 및 제규정의 제정
- 이사선출에 관한 사항

☞ 개정안

제19조(기능) 총회는 본회의 최고의결기관으로서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 4호 상동
5. 가맹경기단체 및 지방체육회 지원에 관한 사항
6. 사무처 및 선수촌의 운영 계획에 관한 사항
7. 정관 개정 및 제 규정의 제정에 관한 사항
8. 이사선출에 관한 사항
9. 정관규정에 의해 대의원총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10. 기타 중요사항

□ 제20조(소집)

제20조(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누되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정기총회는 회계년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이를 소집한다.

☞ 개정의 필요성

- 정기총회 개최 일시가 구체적으로 명기되지 않아 조직 운영의 예측성이 부재하여, 총회개최 등에 준비가 소홀해 질 개연성이 높음으로 정기총회 개최 일시를 명시하여 조직 운영의 예측성을 담보하도록 함

☞ 개선 방향

- 정기총회 매년 2월 셋째주 목요일로 명기

☞ 개정안

- 제20조(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누되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정기총회 매년 2월 셋째주 목요일에 개최한다.

- ② 총회소집은 토의사항을 명기하여 7일전, 긴급을 요할 때에는 3일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 **개정의 필요성**

- 회장 선출시에는 후보자들의 충분한 선거운동을 위하여 일반적인 총회소집 통지기간보다 길게 하고, 제14조의 회장선출방법 조문과 연계하여 통일할 필요가 있음

☞ **개선 방안**

- 회장 선출시에는 후보자를 확정하여 14일전 통지

☞ **개정안**

- ② 총회소집은 토의사항을 명기하여 7일전, 긴급을 요할 때에는 3일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단 회장을 선출하는 정기총회는 후보자를 확정하고 기표번호를 명기하여 14일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 **제21조(총회소집의 특례)**

제21조(총회소집의 특례) ③ 제2항에 의한 총회는 출석대의원 중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 **개정의 필요성**

- 이 정관에 의하면 총회의 의장은 회장이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회장의 궐위 또는 유고로 직무수행이 곤란한 경우에는 수석부회장이 권한대행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 조항은 불필요한 조항으로 삭제가 필요함

☞ **개정안**

- ③ 제2항에 의한 총회는 출석대의원 중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삭제)

□ 제24조(임원의 불신임)

제24조(임원의 불신임) ① 총회는 임원에 대하여 부분적 또는 전체적으로 해임을 의결할 수 있다. 다만, 그 임원이 취임한 날로부터 만 1년이 경과되어야 한다.

☞ 개정의 필요성

- 총회에 임원 해임권을 부여하면서도 해임 가능 기간을 1년 유예하는 것은 1년간 신임임원 임기를 보장하여 역량을 발휘할 기회를 준다는 측면에서는 바람직한 방안이기는 하나 전체적으로 해임 의결 되었을 경우에도 임원취임 1년 경과 예외 규정을 두는 것은 외부 환경 변화에 대한 조직 대응력을 늦추는 원인을 제공할 수도 있음
- 따라서 전체 해임시에는 1년 경과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며 동시에 총회의 권위를 강화하는 방안이 될 것임

☞ 개선 방향

- 전체 해임시는 경과기간 불인정

☞ 개정안

- 제24조(임원의 불신임) ① 총회는 임원에 대하여 부분적 또는 전체적으로 해임을 의결할 수 있으며 해임 의결은 그 임원이 취임한 날로부터 만 1년이 경과되어야 한다. 단, 전체 해임시는 1년 경과 규정은 예외로 한다.

□ 제27조(구성)

제27조(구성)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및 이사로 구성하며, 본회의 최고집행기관이다.

☞ 개정의 필요성

- 이사회에 회장이 임명한 부회장이 전원 포함되는 것은 이사회를 통하여 회장의 전횡이 합리화 될 수 있으며, 이사회가 체육회의 최고집행기관이 되는 것은 이사회가 집행기관인 사무처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되는 바,

이사회가 최고집행기관이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 따라서 이사회를 총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처리하는 위임처리 기관으로 위상을 재정립하고 제13조의 임원의 선출 방법 조항에서 이사 구성방법을 변경함에 따라 전체적인 조문 재작성이 필요함

☞ 개선 방향

- 이사회를 현장 체육인과 전문가를 중심으로 구성하고 역할 재조정

☞ 개정안

- 제27조(구성) 이사회는 회장, 수석부회장 및 이사로 구성하며, 총회에서 위임한 사항과 이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 제28조(기능)

제28조(기능)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
4. 정관개정안 작성에 관한 사항(개정 '89. 6. 21)
5.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6. 이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7. 가맹경기단체의 지원육성에 관한 사항(개정 '00. 12. 5)
8. 각종위원회의 조정 및 통할
9. 사무처 및 선수촌의 지휘감독(개정 '90. 4. 13)
10. 총회 부의사항의 작성 상정
11. 사무총장 및 선수촌장의 임명동의(개정 '90. 4. 13)
12. 제규정의 제정

13. 기타 중요사항

☞ 개정의 필요성

- 체육회의 최고의결기관은 대의원 총회인바 이사회가 가진 일부 권한 중 체육회 전체에 미치는 중요 사항 및 기본 계획 등에 대해서는 결정권을 총회에서 처리하도록 하여 총회의 권한과 권위를 강화하고, 이사회는 총회 개최가 어렵거나 총회에서 위임한 사항들과 이 정관이 정하는 사항들을 심의 의결하도록 함

☞ 개선 방향

- 사무처 이관 :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3. 예산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 10. 총회 부의사항의 작성 상정 등
- 총회 이관 : 7. 가맹경기단체의 지원육성에 관한 사항, 9. 사무처 및 선수촌의 지휘감독, 12. 제규정의 제정

☞ 개정안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삭제) => 사무처의 권한
2. 사업계획운영에 관한 사항 => 세부사업계획운영에 관한 사항
- ☞ 사유 : 사업운영계획을 세부사업운영계획으로 수정함. 사업운영계획을 대의원총회에서 의결한 사업계획을 실천하기 위한 세부사업계획 운영으로 명확히 함
3. 예산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삭제) => 사무처의 권한
4. 정관개정안 작성에 관한 사항(개정 '89. 6. 21)
5.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6. 이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7. 가맹경기단체의 지원육성에 관한 사항(삭제) => 총회로 이관
8. 각종위원회의 조정 및 통할

- 9. 사무처 및 선수촌의 지휘감독(삭제) => 총회로 이관
- 10. 총회 부의사항의 작성 상정(삭제) => 사무처의 권한
- 11. 사무총장 및 선수촌장의 임명동의(개정 '90. 4. 13)
- 12. 제규정의 제정(삭제) => 총회로 이관
- 13. 기타 중요사항(수정) => (기타 본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자문)

□ 제30조(소집)

제30조(소집) ② 이사회의 의장은 회장, 부회장의 순으로 한다.

☞ 개정의 필요성

- 수석부회장제 도입에 따른 수석부회장의 역할 명시

☞ 개정안

- ② 이사회의 의장은 회장, 수석부회장, 연장자 부회장의 순으로 한다.

□ 제32조의2(KOC 임원의 발언권)

제32조의2(KOC 임원의 발언권) 정관 제33조 규정에 의해 설치된 KOC의 명예
총무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응답할 수 있다.

☞ 개정의 필요성

- KOC의 명예총무가 체육회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토록 하는 것은 일면 바람직한 것으로 보이나, 상호 별개의 조직인 KOC의 명예총무에 대한 출석 등을 체육회 정관에 명시하는 것은 바람직한 규정이라 할 수 없음

☞ 개선 방향

- 이 규정 삭제

□ 제33조(설치)

- 제33조(설치) ① 대한올림픽위원회(Korean Olympic Committee, 약칭 KOC)는 그 소관사항에 관하여는 독자적 결정 및 시행의 권한을 가진다.
- ② 동위원회에 관한 규정은 동위원회 위원총회에서 따로 정한다.

☞ 개정의 필요성

- 체육회 정관에서 국제기구의 한국지부인 대한올림픽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은 조직의 독립적 운영을 권장하는 올림픽헌장에 부합하지 못함
- 따라서 동 장에 대한 전체를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함

☞ 개선 방향

- 제 6장 전체 삭제 처리

□ 제37조(생활체육위원회의 설치)

제37조(생활체육위원회의 설치) 본회에 제4조제9호의 사업에 관한 사항을 조사, 연구, 심의하고 이사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생활체육위원회를 둔다.
(개정 '90. 4. 13)

☞ 개정의 필요성

- 기능적으로 국민생활체육협의회 고유 업무와 중복되는 생활체육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생활체육 비전문기관인 체육회에 생활체육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것은 단체간 기능 중복을 유발하는 원인이 됨으로 생활체육 위원회 설치 규정은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함

☞ 개선 방향

- 생활체육위원회 관련 규정(37~39조) 삭제
- 제38조(생활체육위원회의 조직) - 삭제
- 제39조(생활체육위원회의 임무) - 삭제

□ 제58조(사업계획, 예산, 결산의 승인)

제58조(사업계획, 예산, 결산의 승인) ① 본회의 사업계획과 예산안은 매회계년도마다 회장이 이를 편성하여 이사회 및 대의원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부처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개정의 필요성

- 이사회 및 총회의 기능 재조정에 따라 체육회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은 대의원 총회에서 결정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 개정안

- 제58조(사업계획, 예산, 결산의 승인) ① 본회의 사업계획과 예산안은 매회계년도마다 회장이 이를 편성하여 대의원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부처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전항의 경우 제4조 제8호 및 제9호의 사업계획과 예산안은 학교체육위원회, 생활체육위원회 및 여성체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90. 4. 13)

☞ 개선 방향

- 생활체육위원회 및 (삭제)

□ 제59조(기금 및 적립금)

제59조(기금 및 적립금) ① 본회는 이사회 및 대의원총회의 의결을 거쳐 특별한 목적을 위한 기금 또는 적립금을 둘 수 있다.

☞ 개정의 필요성

- 이사회 및 총회의 기능 재조정에 따라 체육회 운영의 주요사항은 대의원 총회에서 결정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 개정안

- 제59조(기금 및 적립금) ① 본회는 대의원총회의 의결을 거쳐 특별한 목적을 위한 기금 또는 적립금을 둘 수 있다.

□ 제65조(표창 및 징계)

제65조(표창 및 징계) 본회는 체육계에 공적이 있는 단체 및 개인을 표창하고 비위가 있는 단체 및 개인을 징계하는 권한을 가진다.

☞ 개정의 필요성

- 체육회가 체육계 전체에 대해 징계권을 갖는 것은 일종의 초법적 월권이 될 수 있으며, 징계에 대한 범위와 대상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개선 방향

- 가맹단체 및 등록선수에 대한 징계만 인정

☞ 개정안

- 본회는 체육계에 공적이 있는 단체 및 개인을 표창하고 비위가 있는 가맹단체 및 등록 선수·지도자에 대하여 징계할 수 있다. 단, 표창 및 징계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인사위원회나 법제상벌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여야 한다.

□ 제68조(시행세칙)

제68조(시행세칙) 이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세칙 및 제규정은 이사회 의결로써 결정 시행한다.

☞ 개정의 필요성

-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시행세칙이나 제규정을 모두 이사회에서 의결하도록 하여 시행하는 것은 이사회가 최고 의결기관인 총회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으로 세칙과 제규정을 구분하여 제규정에 대한 제정은 대의원총회에

서 의결하는 것이 바람직함

☞ 개선 방향

- 세칙과 제규정을 구분하여 제규정 제정은 대의원총회에서 의결

☞ 개정안

- 이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세칙은 이사회, 제규정은 총회의 의결로써 결정 시행한다.

나. 가맹경기단체 규정

□ 제 9 조(임원의 종류 및 정수)

제 9 조(임원의 종류 및 정수) ①경기단체는 다음의 임원을 둘 수 있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본회의 승인을 얻어 이사를 증원할 수 있다.

1. 선임임원 : 회장 1인 · 부회장 약간인 · 전무이사 1인을 포함한 이사 28인 이내, 감사 2인
2. 대 의 원 : 지부 및 전국규모연맹체별 1인과 중앙대의원 약간인
3. 위촉임원 : 고문 약간인, 참여 약간인, 위원 약간인

② 선임임원중 감사 1인은 회계 전문가를 선출하여야 한다.

☞ 개정의 필요성

- 대한체육회의 정관개정에 따라 하위규정인 가맹경기단체 규정을 전면적으로 제 개정할 필요가 있음
- 가맹경기단체 수준에서 이사의 수 28인은 너무 많은 점이 있음으로 이사수를 소수정예화 하여 조직운영에 관한 의사결정을 신속하게 처리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중앙대의원제도는 자칫 회장의 전횡을 합리화 할 수 있음으로 제16조 제3항의 자격을 갖춘 사람을 중앙대의원으로 선출하기 보다는 이사에 포함시켜 조직운영에 기여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 참여 및 위원제도는 특별한 역할이 없음을 감안하여 폐지가 바람직함

☞ 개선 방향

- 이사수의 28명을 15~20명 수준으로 축소
- 중앙대의원 폐지
- 참여 및 위원제도 폐지

☞ 개정안

○ 제 9 조(임원의 종류 및 정수) ① 경기단체는 다음의 임원을 둘 수 있다.

1. 선임임원 : 회장 1인 · 부회장 5인, 전무이사 1인
2. 이사 : 회장, 수석부회장, 전무이사를 포함한 15명 이내
3. 감사 : 2인
4. 대 의 원 : 지부 및 전국규모연맹체별 1인
5. 위촉임원 : 고문 약간인

다. 시도지부 규정

□ 제10조(선임임원)

제10조(선임임원) ①임원의 선임, 보선 및 임기는 본회 정관에 규정된 바에 각각 준한다.

② 시·도체육회장에는 도지사(시장), 부회장중 1인은 교육감 또는 부교육감을 각각 당연직으로 추대하여야 한다.

③ 회장, 부회장, 사무처장은 집행부의 당연직 이사이다.

☞ 개정의 필요성

- 이 규정에 따라 시도지사의 시도체육회장 당연직화는 지방체육발전을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투자가 필요한 시기에는 당연한 결과라 할 수 있으나 지방자치 실시 이후 단체장들이 정치적으로 선출됨으로 인해 체육단체가 정치적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상존함
- 단체장이 회장을 겸임하므로 인해 체육회가 문제를 유발할 경우 감독기관인 자치단체에서 단체장의 사전 승인 없이 사무감사 등을 실시할 수 없어 체육회에 대한 견제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문제점이 나타나기도 함
- 따라서 지방체육회장의 자치단체장 당연직을 폐지하고 일정한 절차를 거쳐 선출하도록 하여 단체장의 당연직화에 의한 정치적 악용 가능성을 사전에 막고, 지방체육인들이 원하는 자를 회장으로 선출하여 체육조직의 자치화를 유도할 필요가 있음
- 또한 회장, 부회장, 사무처장 등 사무처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모든 집행부가 당연직 이사로 참여하는 것은 이사회를 통한 사무처 견제기능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원인을 제공함. 따라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 개선 방향

- 자치단체장의 지방체육회장 당연직 폐지하고, 시도지부장은 선거를 통해서 선출토록 함

- 이사회 참여 임원수 제한

☞ 개정안

- ② 시·도체육회장은 대의원 총회에서 선출하며, 부회장중 1인은 시도교육청에서 추천한 1인을 당연직으로 추대하여야 한다.
- ③ 회장, 수석부회장은 집행부의 당연직 이사이며, 사무처장은 이사회의 간사로 참여하여야 한다.

라. 전국체육대회 규정

□ 제19조(개최지 결정)

제19조(개최지 결정) ① 개최지는 신청 시도지부의 유치신청서류를 기준으로 전국체육대회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5년 전까지 이사회가 최종결정한다.

- ② 전국체육대회 위원회는 유치신청 시도지부가 제출한 유치신청서류에 대한 의견청취나 현장실사가 필요할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 ③ 본회는 개최지를 결정, 승인한 후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 ④ 전국대회 개최가 결정된 시도지부는 본회와 협약서를 체결하여 대회 승인조건과 전국대회에 관한 제규정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 개정의 필요성

- 전국체전은 대한체육회의 주관사업이긴 하나 실제로는 중앙정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시설설치 및 행사비 보조를 함
- 또한 행사준비는 유치 지방자치단체가 기획단 등을 구성하여 준비함. 즉, 전국체전은 대회를 유치한 지방자치단체와 해당 자치단체의 체육회 및 중앙정부가 연합하여 치르는 국가대회임
- 따라서 전국체전 개최지 후보지역 추천권을 시도지사협의회에 위임하거나 시설설치 등에 대한 재정지원을 담당하는 정부로 환수하여 지방의 재정구조나 시설 보유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는 것이 예산 운영의 비합리성을 제거할 수 있을 것임

☞ 개선 방향

- 개최지 후보지역 결정권 시도지사협의회에 위임

- 최종결정은 지방의 재정구조나 시설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정부가 결정

☞ 개선안

- ① 개최지 후보지 결정은 전국시도지사 협의회에서 5년전까지 최종결정하여 주무부처장관에게 보고한다. 주무부처 장관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전국시도지사협의회에서 결정하여 추천한 지역을 개최지로 선정하여야 한다.
- ② 개최지 신청은 개최를 희망하는 자치단체가 유치신청서서를 작성하여 본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전국체육대회위원회는 유치신청서류를 기준으로 예비심사를 실시하여 심사결과를 전국시도지사협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③ 본회는 개최지를 결정, 승인한 후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삭제)

2. 대한올림픽위원회 주요규정

가. 대한올림픽위원회 규정

□ 제5조 조직

제 5 조(조직) ①본위원회는 다음의 위원으로 조직한다.

1.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제올림픽위원회 위원
2. 올림픽 및 아시아경기대회 종목에 해당하는 경기단체로서, 대한체육회 및 당해 종목의 국제경기연맹에 가입한 경기단체가 회장단 중에서 선출한 각 1인의 위원
3. 대한체육회 회장 및 사무총장

☞ 개정의 필요성

- IOC 헌장 제29조의 NOC의 구성에 따르면 NOC는 올림픽 종목에 해당하는 국제연맹에 가입된 국가 내 모든 경기연맹이나 그 대표자나 올림픽에 참여해 온 현·전직 선수들, 올림픽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IOC 인정 종목의 국제연맹에 가입된 국가 내 모든 경기연맹이나 그 대표자로 구성하게 되어 있음. 그러나 이 정관에는 아시아경기대회 종목에 해당하는 경기단체까지 포함하도록 하고 있어 IOC 규정에 상충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 규정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 또한 대한체육회장이나 체육회 사무총장을 모두 당연직 위원으로 명시하는 것은 두 조직간의 상호 정보교류차원에서 일면 바람직하다 할 수 있으나 회장이 임명하는 사무총장은 체육회의 사무처를 관장한 직위인데, 그 직위를 이용하여 대한올림픽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함
- 만약 체육회에 당연직 위원이 더 배정할 필요가 있다면 사무총장보다는 대표팀 선수를 관리하고 육성 지원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선수총장이 더 바람직함
- 따라서 IOC 규정에 따라 KOC 위원을 선정하고, 대한체육회 사무총장 대신

선수총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위촉하여 국가대표 선수육성 및 지원의 경
험을 대한올림픽위원회 운영에 반영토록 유도할 필요가 있음

☞ 개선 방향

- IOC 인정 종목의 국제연맹에 가입하지 않고 아시아경기대회 종목에만 해당
하는 경기단체 임원 배제
- 선수총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배정

☞ 개정안

2. 올림픽종목이거나 IOC 인정 종목의 국제연맹에 가입하고 아시아경기
대회 종목에 해당하는 경기단체가 회장단 중에서 선출한 각 1인의
위원
3. 대한체육회 회장 및 사무총장

□ 제 5 조의 2(위원의 사임)

제 5 조의 2(위원의 사임) ① 위원은 언제든지 위원장에게 사임원을 제출함으
로써 위원직을 사임할 수 있다.

② 제5조 제1항 제4호에 의하여 선출된 위원이 정당한 사유를 사전에 문서
로 제출치 아니하고 2회 연속 총회에 참석하지 아니하거나, 본위원회
주최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석하지 아니한 경우, 위원 자격이 상실된다.

☞ 개정의 필요성

- 본위원회 주최 행사에 참여하지 아니한 때의 행사 종류가 불분명하여
사임처리를 두고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크므로 이에 주최 행사
범위를 명확히 하여 사임처리에 따른 갈등을 사전에 차단할 필요가 있음

☞ 개선 방향

- 사임처리 범위 명확화

☞ 개정안

- ② 제5조 제1항 제4호에 의하여 선출된 위원이 정당한 사유를 사전에 문서로 제출치 아니하고 2회 연속 총회에 참석하지 아니할 경우 위원 자격이 상실된다.

□ 제 6 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제 6 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위원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명예위원장 1인
 위 원 장 1인
 고 문 약간인
부 위 원 장 약간인
 총 무 1인
상 임 위 원 20인 이상 30인 이내(총무 포함)
 감 사 2인

☞ 개정의 필요성

- 부위원장 약간 명에 대한 근거가 불확실하여 부위원장 수를 명확히 규정하여 조직운영의 사적 감정 이입 방지할 필요가 있으며, 상임위원 수가 20인 이상 30인 이내로 전체위원 40인에 비해 너무 많아 이에 대한 적정수 규정이 필요함
- 또한 총무는 사무처 운영을 책임지는 직위로서 직접 상임위원에 포함되는 것보다는 상임위원회 간사로 역할을 수행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 각 선출임원에 여성비율을 명시하지 않아 여성참여가 소외될 가능성이 상존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함

☞ 개선 방향

- 부위원장 수를 명시하며, 상임위원 수를 위원의 1/3수준이하로 조정하고 여성비율 명시

☞ 개정안

- 부 위 원 장 5인(수석부위원장 및 여성 1인 이상 포함)
- 상 임 위 원 15인 이내(여성비율 30% 반영)

□ 제 7 조(임기)

제 7 조(임기) ① 본위원회 임원의 임기는 4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일수를 기준으로 하지 아니하고 정기위원총회를 기준으로 한다.

☞ 개정의 필요성

- 조직은 정기총회를 통하여 조직운영에 대한 점검 및 미래 방향설정을 추구하고, 그 방향에 적합한 인물을 임원진으로 선임하여 집행체계를 구축하여야 하나, 임원임기 기산일이 불분명하여 정기위원총회가 열리지 않았을 경우 임기기간이 적용되지 않아 각종 부작용(의사결정 등)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음

☞ 개선 방향

- 정기총회 날짜를 명기(예 2월 넷째주 목요일 등)하고 기간 종료 후 자동으로 자격상신토록 함

☞ 개정안

제12조(임원의 임기) ① 본위원회 임원의 임기는 4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임기의 기산은 정기위원총회를 기준으로 하며, 임원은 연임할 수 있다.

③ 임원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자가 취임하기 전까지는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개정의 필요성

- 임원은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자가 취임하기까지는 그 직무를 집

행하도록 하는 현 규정은 임기 만료자가 후임자의 역할을 수행토록 하고 있어 중요사항에 대해 결정시 책임성이 불투명할 것임

- 또한 후임자 취임 이전의 업무 공백이 우려된다면 권한 대행을 지정하여 조직의 연속성을 띠게 하면 될 것임. 따라서 임기 만료시에는 권한도 만료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차순위 권한 대행을 하도록 명시해야 함

☞ 개선 방향

- 임기만료일 이후 전임자 모든 업무 참여 불가
- 후임자 취임이전엔 권한대행자 지정 명문화

☞ 개정안 :

- ③ 임원의 임기가 만료된 후에도 후임자가 취임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그 직무 대행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위원장 대행 : 수석부위원장
2. 수석부위원장 대행 : 부위원장 중 연장자 순
3. 감사 대행 : 재정 감사에 한해 필요시 외부 기관에 위임
4. 1호 내지 3호 외의 그 밖의 임원 대행 : 없음

□ 제 9 조(임원의 선출 방법)

제 9 조(임원의 선출 방법) 본위원회의 임원은 사전에 임원 개선을 목적으로 소집된 위원총회에서 선출한다.

1. 명예위원장은 올림픽운동과 국내 아마츄어 스포츠발전에 크게 기여한 인사 중에서 위원총회의 결의로 추대한다.
2. 위원장은 위원총회에서 대한체육회 회장을 추천 선임한다.

☞ 개정의 필요성

- 대한체육회장을 당연히 하여 추천 선임하는 것은 올림픽헌장과 불부합하며, 위원중에서 호선하도록 하여 체육회장의 당연직화를 방지하고 올림픽헌장 정신에 부합도록 할 필요가 있음

☞ 개선 방향

- 위원중에서 선출하도록 함

☞ 개정안

- 2. 위원장은 위원총회에서 선출하여 선임한다.
- 4. 수석부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총회에서 선임한다.(수석부위원장제 도입에 따른 수정)
- 5. 상임위원 및 감사는 위원총회에서 선임하되, 상임위원의 결원에 의한 보선은 상임위원회에서 하고, 차기 위원총회에 이를 보고한다.
- 7. 제5조 제1항 제4호에 의한 위원 중 결원이 있을 때에는 상임위원회의 의결로써 보선하고, 그 결과를 차기 위원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개정의 필요성

- 제5조 제1항 제4호를 포함한 신규위원에 대한 선임을 상임위원회에서 한다는 것은 위원총회의 기능을 약화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임원 선임에 관한 모든 권한은 위원총회에 부여하여 위원총회의 권위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개선 방향

- 상임위원회 의결권을 위원총회로 이관

☞ 개정안

- 5. 상임위원 및 감사는 위원총회에서 선임한다.
- 7. 제5조 제1항 제4호에 의한 위원 중 결원이 있을 때에는 위원총회에서 보선한다.

□ 제10조(임원의 직무)

제10조(임원의 직무) ① 명예위원장과 고문은 위원장단의 자문기관이며, 상임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② 위원장은 본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할하며, 모든 회의의 의장이 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 유고시 위원장이 지명한 자가 그 직무를 대리한다.

☞ 개정의 필요성

- 위원장이 지명하지 않고 유고될 경우는 직무대행에 대한 규정이 불분명하여 조직운영의 혼란이 가중될 수 있으므로 권한 대행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직무대리와 권한대행은 법률상 직무수행에 대한 책임과 한계가 다르므로 권한 대행으로 용어 수정

☞ 개선 방향

- 권한 대행권자 명확화 및 조문 내용 수정

☞ 개정안

- ② 위원장의 궐위 및 사고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곤란할 경우에는 수석부위원장이 위원장의 권한을 대행한다. 단, 수석부위원장의 궐위 및 사고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곤란할 경우에는 부위원장 중 연장자 순으로 한다.

□ 제11조(구성)

제11조(구성) ① 위원총회는 제5조 제1항 각 호의 위원으로써 구성하고, 본 위원회의 최고 의결기관이다.

② 위원총회는 제5조 제2호의 위원 중 올림픽대회 및 아시아경기대회 종목 경기단체 추천위원이 과반수를 차지하여야 한다.

☞ 개정의 필요성

- 위원회의 위원 구성 자격 강화에 따라 아시아경기대회 관련 조항을 삭제하여 IOC규정에 부합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음

☞ 개선 방향

- 아시아경기대회 관련 조항 삭제로 IOC규정에 부합 유도

☞ 개정안

② 위원총회는 제5조 제2호의 위원 중 올림픽대회 종목 경기단체 추천위원이 과반수를 차지하여야 한다.

□ 제13조(총회의 소집)

제13조(총회의 소집) ① 위원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의 2종으로 하고,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정기총회는 매 회계년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이를 소집한다. 다만, 상임위원회의 결의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서면 요청이 있을 때에는 2주일 이내에 이를 소집하여야 한다.

☞ 개정의 필요성

- 정기총회 개최 일시가 구체적으로 명기되지 않아 조직 운영의 예측성이 부재하여, 총회개최 등에 준비가 소홀해 질 개연성이 높음으로 정기총회 개최 일시를 명시하여 조직 운영의 예측성을 담보하도록 함

☞ 개선 방향

- 정기총회 매년 2월 넷째 주 목요일로 명기

☞ 개정안

- 제13조(총회의 소집) ① 위원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의 2종으로 하고,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정기총회 매년 2월 넷째 주 목요일에 개최한다. 다만, 상임위원회의 결의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서면 요청이 있을 때에는 2주일 이내에 이를 소집하여야 한다.
- ③ 본위원회의 위원장이 총회의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유고시에는 수석부위원장(조문 수정)이 의장직을 대행하며, 위원장 자신의 진퇴에 관한 의제를 심의할 경우에는, 위원 중에서 임시의장을 선출하여야 한다.

□ 제15조(구성)

제15조(구성) 상임위원회는 IOC위원, 위원장, 부위원장 및 상임위원으로 구성하고, 본위원회의 최고 집행기관이다.

☞ 개정의 필요성

- 이 규정에 의하면 부위원장 모두가 상임위원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구성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개선 방향

- 부위원장을 수석부위원장으로 변경

☞ 개정안

- 제15조(구성) 상임위원회는 IOC위원, 위원장, 수석부위원장 및 상임위원으로 구성하고, 본위원회의 최고 집행기관이다.

□ 사무국

제25조 본위원회의 사무집행을 위하여 대한체육회 사무처 내에 전담 사무
부서를 둔다.

☞ 개정의 필요성

- 국제기구의 국내 지부를 대한체육회 사무처 내에 두는 것은 조직위상으로도 맞지 않으며, 올림픽헌장에도 불부합하는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

☞ 개선 방향

- 독립된 사무처를 두도록 함

☞ 개정안

- 본위원회의 사무집행을 위하여 독립된 사무처를 둔다.

3. 국민체육진흥공단 주요규정

가. 국민체육진흥기금지원 규정

□ 제7조 (기금사용대상자 및 지원신청) 제1항 및 제2항

제7조 (기금사용대상자 및 지원신청) ① 국민체육진흥법 제22조제1항 및 공단 정관 제33조의 사업을 위하여 기금을 보조 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문화체육관광부가 직접 관장하는 체육관련 법인
2.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3. 초·중등 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학교
4.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특별히 인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
5. 그 밖에 공단 이사장이 국민체육진흥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고 인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등

☞ 개정의 필요성

- IOC 종식종목 및 인정종목 경기단체와 아시아경기 정식종목 경기단체들에 대해서 기금사용대상자로 구체화되지 못했으며, 법인 경기단체가 독립된 법인임에도 불구하고 기금지원 직접 신청대상자 여부가 불확실함
- IOC 종식종목 및 인정종목 경기단체와 아시아경기 정식종목 경기단체들을 기금사용대상자로 구체화하여 법인 경기단체의 회계운영 능력을 제고하고, 동시에 법인 경기단체의 자치능력을 제고토록 유도

☞ 개선 방향

- 법인 경기단체에게 직접 기금지원 신청토록 기금지원 시스템 개편

☞ 개정안

- 5. IOC 종식종목 및 인정종목 경기단체와 아시아경기 정식종목 경기단체(신설)
 - 6. 그 밖에 공단 이사장이 국민체육진흥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고 인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등(호 번호 수정)
- ② 제1항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기금사용대상자중 사업 수행을 위해 공단으로부터 기금을 보조받고자 하는 자(이하 "보조사업자"라 한다)는 매년 보조받고자 하는 사업의 목적과 내용, 사업수행에 소요되는 경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1호의 보조금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개정의 필요성

-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법인 체육단체는 자체 법인격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가맹기관에 의해 기금 지원신청을 하는 것은 법인 자체의 경쟁력 약화 요인이자 법인격으로서의 의무 역할을 방기하는 행태임
- 이러한 모호성에 의하여 법인 경기단체가 자체 회계능력을 향상시킬 기회를 박탈하게 되고, 상위기관에 대한 의존성과 행정절차의 중복성이 심화되어 나타남. 이는 정부의 규제완화 및 권한이양 방침과도 상반됨
- 따라서 법인 경기단체의 회계능력을 향상시키고 행정절차의 간소화 및 신속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법인 경기단체의 경우 중간경유 절차를 폐지하여 기금지원기관에 직접 신청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 개선 방향

- 상급단체를 통한 경유 신청 폐지

☞ 개정안

- ② 제1항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기금사용대상자중 사업 수행을 위해 공단으로부터 기금을 보조받고자 하는 자(이하 "보조사업자"라 한다)는 매년 보조받고자 하는 사업의 목적과 내용, 사업수행에 소요되는 경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1호의 보조금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이사장에게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 제1호, 제4호, 제5호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 중 경기단체에 해당하는 기금사용대상자도 이와 같다.

V. 결 론

- 스포츠는 국민생활 속에서 문화의 한 부분으로서 삶의 질을 제고하며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수단으로 자리 잡아 가면서 스포츠가 사회에서 차지하는 영역과 영향력은 갈수록 커지고 있음. 또한 스포츠의 발전과 함께 스포츠에 대한 국가의 관여와 역할도 갈수록 커지고 있음. 더구나 스포츠는 저변확대를 통하여 스포츠인구를 폭발적으로 증가시키면서 스포츠산업을 부흥시키고 프로스포츠의 진작과 스포츠의 생활화를 실현하고 있음
- 따라서 스포츠영역에서 법의 필요성은 커지고 있으며, 이미 여러 나라에서 국가의 최고 규범인 헌법에 스포츠에 관한 조항을 두거나 근거를 마련하고 있거나 구체적으로는 스포츠관련법을 제정하여 스포츠를 육성·장려하고 있음
- 또한 스포츠의 국제화 시대에 있어서 스포츠가 갖는 문화성과 경제적 가치는 더 이상 현행 스포츠법의 체계로 감당하기 어렵게 하고 있음. 따라서 스포츠의 기본적인 정신과 현실적 이해관계를 고려하는 종합적인 법체계가 수립되어야 함
- 나아가 체육단체와 관련된 제 규정들은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여러 문제를 갖고 있음. 특히 그 구성과 조직에 있어서 민주주의 원리와 지방분권의 원칙 등에 합치되지 않는 문제가 있는데, 이러한 규정들은 체육단체의 선진화에 있어서 걸림돌이라 할 수 있음
 - 즉, 국제올림픽위원회와 관련하여 대한올림픽위원회는 독립된 조직이라 할 수 있으나, 대한올림픽위원회가 정부의 감독을 받는 대한체육회에 있는 한 정부의 통제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음
- 결과적으로 보면 현행 체육단체의 관련 규정들은 시대에 뒤떨어지는 내용들을 담고 있는 것은 사실임. 이러한 규정들로 인하여 스포츠의 자율성이 저해되고 민주화가 진전되지 않으면서 체육계가 가지고 있는 고질적

인 병폐들이 개선되지 않는 문제까지 야기하고 있음. 따라서 21세기의 패러다임에 맞는 체육단체의 선진화를 위한 관련 규정들의 개선이 시급함

<부록 1>

국민체육진흥기금지원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국민체육진흥법 제22조, 동법 시행령 제39조와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체육진흥기금관리·운용 지침(이하 “관리·운용 지침”이라 한다)에 따라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국민체육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서 보조 및 출연하는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1. 7. 13, 2003. 5. 9>

제2조 (적용범위) 기금의 보조 또는 출연(이하 “기금지원”이라 한다)에 관하여 관련법령 및 관리·운용지침과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 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1. 7. 13, 2003. 5. 9>

제3조 (기금지원·평가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국민체육진흥법 제22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에 규정된 기금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기금지원성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기금지원·평가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공단에 둔다. <개정 2001. 7. 13, 2003. 5. 9>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로 하되 해당분야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높은 자를 그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00. 6. 9, 2001. 7. 13, 2003. 5. 9>

1. 공단 상무이사
2. 금융·재정분야 인사 중 1인
3. 스포츠산업분야 및 체육계 인사 중 1인 <개정 2003. 5. 9>
4. 법조계 인사 중 1인
5. 체육학계 및 체육관련연구단체 인사 중 2인 <개정 2003. 5. 9>

6. 회계관련 분야 인사 중 1인
7. 그 밖의 사회단체 인사 중 1인
- ③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이하 "이사장"이라고 한다)은 제2항 제1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8인 이내의 위원(위원장 1인 포함)을 위촉한다. 단, 기금지원을 받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을 제외한다. (학술단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0. 6. 9, 2003. 5. 9>
- ④ 의안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표결에 참가할 수 없다. <신설 2001. 2. 28>
- ⑤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제2항제1호에 따른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00. 6. 9>
- ⑥ 위원장은 공단 상무이사로 하고 간사는 기금지원 업무를 관장하는 부서의 해당 부장이 되며, 서기는 해당 팀장이 된다. <개정 98. 9. 14>
- ⑦ 위원은 심의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공단 또는 보조사업자와 출연사업자(기금사용신청자를 포함한다. 이하 "기금사용자"라 한다)에게 관련자료 및 기록의 제출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심의회는 심의안건에 대하여 이해관계인(기관·단체를 포함한다.)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⑧ 위원회는 기금지원사업의 성과평가를 위하여 분야별 실무평가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05. 5. 9>

제4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지원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지원성과 평가에 관한 사항 <개정 2003. 5. 9>
3. 그 밖에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5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 ② 정기회의는 6월중에 임시회의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3. 5. 9, 2007. 4. 18>

-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03. 5. 9>
- ④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경우 결정권을 가진다.
- ⑤ 위원장의 유고시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⑥ 위원이 부득이하여 회의에 참석할 수 없을 때에는 그가 지명하는 대리인에게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인은 위임장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수당)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당해년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3. 5. 9>

제2장 기금사용신청 및 기금지원결정

- 제7조 (기금사용대상자 및 지원신청) ① 국민체육진흥법 제22조제1항 및 공단 정관 제33조의 사업을 위하여 기금을 보조 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01. 7. 13, 2003. 5. 9>
- 1. 문화체육관광부가 직접 관장하는 체육관련 법인 <신설 2001.7.13>
 - 2.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신설 2001. 7. 13>
 - 3. 초·중등 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학교 <신설 2001. 7. 13>
 - 4.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특별히 인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 <신설 2001. 7. 13>
 - 5. 그 밖에 공단 이사장이 국민체육진흥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고 인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등 <신설 2001. 7. 13>
- ② 제1항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기금사용대상자중 사업 수행을 위해 공단으로부터 기금을 보조받고자 하는 자(이하 "보조사업자"라 한다)는 매년 보조받고자 하는 사업의 목적과 내용, 사업수행에 소요되는 경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1호의 보조금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이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3. 5. 9>

- ③ 제1항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기금사용대상자중에서 국민체육진흥법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단으로부터 출연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출연사업자"라 한다)는 기재한 별지 제1호의 출연금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출연금의 용도, 출연시기등을 기재한 출연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경기단체가 출연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인설립허가증등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1. 7. 13, 2003. 5. 9>
-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보조금(출연금)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제출하려는 기금사용자중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사전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03. 5. 9>
- ⑤ 이사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기금사용 대상자에게 기금사용신청지침을 매년 5월10일까지 수립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1. 7. 13, 개정 2003. 5. 9, 2007. 4. 18>
- ⑥ 기금사용 대상자는 제5항의 기금사용신청지침에 따라 별지 제1호 서식 보조금(출연금)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매년 5월말일까지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1. 7. 13, 개정 2003. 5. 9, 2007. 4. 18>

제7조의2 (기금사용신청이 없는 사업에 대한 예외조치) 이사장은 제7조의 규정에 따른 기금사용신청이 없는 사업의 경우에도 기금운용계획안의 정부검토 및 국회심의 과정에서 기금지원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기금운용계획안에 계상할 수 있다. <신설 2003. 5. 9>

제7조의3 (기금사용자의 자료제출 등) 기금사용자는 이사장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기금사용신청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설명하여야 한다. <신설 2003. 5. 9>

제8조 (지원계획 심의) ① 이사장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기금사용대상자가 제출한 보조금(출연금)신청서를 토대로 기금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에 부의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지원계획을 심의한 후 그 결과를 기금운용심의회에게 제출한다. <개정 2003. 5. 9>

제9조 (지원결정) 기금지원계획은 기금운용심의회에서 심의된 기금운용계획안이 국가재정법 및 관련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회의 의결로써 확정된다. <개정 2003. 5. 9, 2007. 4. 18>

제10조 (지원조건) 이사장은 확정된 기금지원계획에 따라 보조금 또는 출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 기금지원 목적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03. 5. 9>

제3장 기금의 지원

제11조 (지원결정통보 및 기금교부계획 수립) ① 이사장은 제9조의 규정에 따른 기금지원계획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지원결정 내용(교부조건을 붙인 경우에는 그 조건을 포함한다)을 기금사용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3. 5. 9>

② 기금사용자는 통보 받은 기금지원계획에 따라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월별·분기별 보조금(출연금) 교부신청서를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이사장은 제2항의 보조금(출연금) 교부신청서 및 기획재정부의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토대로 월별·분기별 기금교부계획을 수립하여 기금사용자에게 통보하되, 월별·분기별 배정은 기금운용 사정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제12조 (교부시기) 보조금 및 출연금의 교부시기는 경상사무비의 경우 월

별 또는 분기별로, 일반사업비의 경우 분할하여 교부할 수 있다.

- 제13조 (목적외 사용금지) ① 기금사용자는 법령 또는 이 규정이 정하는 지원결정 내용과 조건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그 지원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기금을 다른 목적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② 기금사용자는 다른 자금과 별도의 장부를 비치하는 등 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보조사업자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는 자체 회계규정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01. 7. 13>

제14조 (지원결정 취소) ①사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원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3. 5. 9>

1. 기금사용자가 그 지원사업을 중단 또는 폐지한 경우
 2. 기금사용자가 그 지원사업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3. 기금사용자가 기금을 목적 외에 사용하였을 경우
 4. 기금사용자가 그 지원사업의 결정 내용과 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5. 이사장이 지원사업 추진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할 경우
- ② 이사장은 지원결정을 한후 공단의 사정변동으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기금운용계획의 주요항목지출금액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재정법 제70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지원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지원결정의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수행된 부분의 지원사업에 대하여는 그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지원결정을 취소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3. 5. 9, 2007. 4. 18>
- ③ 이사장은 보조금에 대한 지원 결정을 취소할 때 지원금 전액에 대하여 반환을 요구할 수 있으며, 반환요구를 받은 기금사용자는 공단에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1호 및 제5호의 경우로서 기금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아닌경우 기집행분을 제외한 부분에 대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03. 5. 9>

- ④ 제1항에 해당하는 기금사용자에 대해서는 2년간 기금의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제15조 (이의 신청) 기금사용자는 기금의 지원결정·취소, 기금의 반환 청구 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사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제16조 (기금지원사업의 내용변경 등) ① 기금사용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기금지원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기금지원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신설 2003. 5. 9>

- ② 이사장은 제1항에 따른 변경승인이 기금운용계획의 주요항목지출금액 변경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기금운용심의회의 심의 후 국가재정법 제 70조제2항 및 제3항이 정하는 절차를 준용한다. <신설 2003. 5. 9, 개정 2007. 4. 18>

제17조 (지원사용자의 결과보고 및 정산) ① 기금사용자는 지원사업의 수행상황과 결과보고서를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경상사무 및 계속사업의 경우 익년도 30일 이내에 단일 사업의 경우 사업 종료후 30일 이내에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 2. 26>

- ② 제1항의 지원사업 수행상황 또는 결과보고서에는 그 지원사업에 소요된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증빙서와 이사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③ 보조금을 받은 기금사용자는 지원사업 완료후 보조금 사용 내역을 정산하고 잔액이 있을 경우 그 잔액과 동 보조금으로 인해 발생된 이자금에 대하여 이사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18조 (지원사업의 감독 및 확인) ① 이사장은 소속직원 또는 해당분야의

전문가로 하여금 지원사업의 기금 집행에 관하여 관련 장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 ② 이사장은 제17조의 규정에 따라서 기금사용자로부터 지원사업 결과보고서를 받은 때에는 그 보고서의 내용을 검토한 후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보완 서류를 요청하거나 현지 조사를 하여 지원사업의 수행상황과 실적이 지원결정 내용과 조건에 적합한 것인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개정 2003. 5. 9>
- ③ 이사장은 지원사업의 수행상황 또는 실적이 지원결정의 내용과 조건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원사업 내용의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기금사용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사항이 시정될 때까지 기금의 지급을 일시 정지할 수 있다.

제19조 (지원사업 실적보고) 이사장은 매분기 지원실적을 분기 종료후 다음달 20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을 거쳐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매년도 지원실적을 다음 연도 2월말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을 거쳐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3. 5. 9>

제20조 (국민체육진흥기금의 표지) 보조금을 받는 기금사용자는 보조금으로 실시한 사업(사업홍보, 연구보고서 발간, 시설물 구축 또는 용기구 확보 등)에 있어서는 반드시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지원금으로 시행되었다는 문구나 명판을 적당한 위치에 표지하여야 한다.

제4장 기금지원의 평가

제21조 (기금지원의 성과평가) 위원회는 기금지원사업의 성과평가와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확정한다. <신설 2003. 5. 9>

1. 평가계획 수립
2. 평가결과 승인

3. 평가결과에 대한 조치

제22조 (평가계획 및 결과통보) 이사장은 위원회가 확정된 평가계획과 평가결과를 기금사용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3. 5. 9>

제23조 (평가결과에 대한조치) 위원회는 기금지원 사업의 평가결과를 다음 연도 기금지원계획수립에 반영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03. 5. 9>

부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문화체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구성된 기금지원심의위원회 위원 위촉 및 심의결과는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한 것으로 본다.

<부록 2>

대한올림픽위원회(KOC) 규정

제1장 총칙

제 1 조 ①(설립근거 및 명칭) 본위원회는 올림픽헌장 제1장 제4조 및 제4장 규정에 의거하여 설립된 한국의 국가올림픽위원회(National Olympic Committee : 약칭 NOC)로서, 대한올림픽위원회라 칭하고, 외국에 대하여는 Korean Olympic Committee(약칭 : KOC)라 한다.

② (올림픽헌장의 준수) 본위원회는 올림픽운동의 일환으로 구성된 조직으로서 올림픽헌장과 올림픽운동 반도핑규정을 존중하고 IOC의 결정을 준수한다.

제 2 조(주소) 본위원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륜동 88번지에 두며, 주소지의 이전은 상임위원회의 결의에 의한다.

제2장 목적 및 사업

제 3 조(목적) ①본위원회는 올림픽 사업에 관하여 국제올림픽위원회(International Olympic Committee : 약칭 IOC)와 대외적 교섭을 갖는 유일한 단체로서 스포츠활동을 통하여 올림픽정신의 함양, 보급, 스포츠의 기초를 이루는 정신적, 신체적 자질의 발전도모와 국제친선, 세계평화 및 여성의 지위향상을 위한 활동에 참여한다.

② 본위원회는 또한 스포츠윤리의 증진, 도핑과의 전쟁 그리고 환경보호운동을 지원하고 장려하는 사업을 수행한다.

③ 본위원회는 목적 수행을 위해 정부 및 비정부 기구와 협력할 수 있다. 단, 올림픽헌장에 부합해야하며 독립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 4 조(사업) ①본위원회는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세계올림픽연합회(ANOC), 아시아올림픽평의회(OCA)에 대해 한국을 대표한다.
 2. 올림픽대회, 아시아경기대회와 IOC의 후원을 받는 지역대회, 대륙대회, 대륙간대회에 한국을 대표하는 선수단을 구성하여 대회에 파견하고 관리한다.
 3. 국내에 있어서 스포츠의 진흥 및 올림픽 운동의 발전을 도모하고 올림픽 표장 등을 관리한다.
 4. 올림픽청소년캠프, 올림픽아카데미의 대표자 선정 파견 및 주관
 5. 스포츠 의학의 진흥 및 IOC 및 국제경기연맹이 금지한 약물의 사용 금지활동
 6. 올림픽운동 확산을 위한 홍보사업
 7. 대한대학스포츠위원회의 사업 통할
 8. 각국 올림픽위원회와의 스포츠 교류
 9. 상기2에 해당하는 대회의 국내 개최 시 개최도시 지명권 및 올림픽헌장에 근거한 대회조직의 책임
 10. 올림픽박물관, 올림픽아카데미 등 올림픽 교육기구의 설립, 스포츠행정가 연수 및 올림픽 관련 문화 프로그램의 운영, 교과과정 반영 노력을 통한 올림픽증 확산
 11. 기타 본위원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 ② 본위원회는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정치적, 종교적, 또는 경제적 간섭을 받지 아니하며, 인종, 종교, 정치, 성별 등에 따른 차별대우나 폭력 등의 발생시 대응 조치를 취한다.

제3장 조 직

제 5 조(조직) ①본위원회는 다음의 위원으로 조직한다.

1.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제올림픽위원회 위원

2. 올림픽 및 아시아경기대회 종목에 해당하는 경기단체로서, 대한체육회 및 당해 종목의 국제경기연맹에 가입한 경기단체가 회장단 중에서 선출한 각 1인의 위원
 3. 대한체육회 회장 및 사무총장
 4. 위원총회가 선출하는 40인 이내의 인사로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및 올림픽 참가 경험이 있는 현역 및 은퇴선수, 다만 제1, 3, 4호의 위원 총수는 제2호의 위원총수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 ② 본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명예위원 약간인을 둘 수 있다. 명예위원은 상임위원회의 추천에 의하여 위원장이 위촉하고, 각종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 ③ 본위원회의 전위원은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한다.

- 제 5 조의 2(위원의 사임) ① 위원은 언제든지 위원장에게 사임원을 제출함으로써 위원직을 사임할 수 있다.
- ② 제5조 제1항 제4호에 의하여 선출된 위원이 정당한 사유를 사전에 문서로 제출치 아니하고 2회 연속 총회에 참석하지 아니하거나, 본위원회 주최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석하지 아니한 경우, 위원 자격이 상실된다.
- ③ 위원 또는 명예위원이 본위원회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를 하였다고 판단될 경우, 제명될 수 있다.

제4장 임 원

제 6 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위원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명예위원장	1인
위원장	1인
고문	약간인
부위원장	약간인
총무	1인

상 임 위 원 20인 이상 30인 이내(총무 포함)

감 사 2인

- 제 7 조(임기) ① 본위원회 임원의 임기는 4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
되, 일수를 기준으로 하지 아니하고 정기위원총회를 기준으로 한다.
- ② 보선된 임원 및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단, 임원의
임기중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는 전임원이 개선될 경우, 잔여임
기가 1년 이상일 때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하고, 1년 미만일 때에는
전임자의 잔여기간과 정규임기를 가산한 것으로 한다.
- ③ 임원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자가 취임하기 전까지는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④ 제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한 위원이 당해 단체에서 해임 또는
교체 추천되면 본위원회에서도 자동적으로 해임된다.

제 8 조(임원의 자격상실) 본위원회 임원은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그 자격을 상실한다.

1. 위원을 선출한 국내경기연맹의 해체
2. 본인의 사임
3.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때
4. 본위원회 규정 또는 올림픽헌장에 위배된 행위로 인하여 총회에서 해
임된 경우

제 9 조(임원의 선출 방법) 본위원회의 임원은 사전에 임원 개선을 목적으
로 소집된 위원총회에서 선출한다.

1. 명예위원장은 올림픽운동과 국내 아마츄어 스포츠발전에 크게 기여한
인사 중에서 위원총회의 결의로 추대한다.
2. 위원장은 위원총회에서 대한체육회 회장을 추천 선임한다.

3. 고문은 위원장이 위촉한다.
4. 부위원장은 위원총회에서 선임한다.
5. 상임위원 및 감사는 위원총회에서 선임하되, 상임위원의 결원에 의한 보선은 상임위원회에서 하고, 차기 위원총회에 이를 보고한다.
6. 총무는 상임위원회에서 호선한다.
7. 제5조 제1항 제4호에 의한 위원 중 결원이 있을 때에는 상임위원회의 의결로써 보선하고, 그 결과를 차기 위원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임원의 직무) ① 명예위원장과 고문은 위원장단의 자문기관이며, 상임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② 위원장은 본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할하며, 모든 회의의 의장이 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 유고시 위원장이 지명한 자가 그 직무를 대리한다.
- ③ 총무는 위원장의 명에 의하여 본위원회 일반업무를 대리하며, KOC소관 분과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 ④ 상임위원은 상임위원회를 구성하고, 상임위원회에 출석하여 회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다.
- ⑤ 감사는 본위원회 업무를 감사하고, 이를 위원총회에 보고한다.

제5장 위 원 총 회

제11조(구성) ① 위원총회는 제5조 제1항 각 호의 위원으로써 구성하고, 본 위원회의 최고 의결기관이다.

- ② 위원총회는 제5조 제2호의 위원 중 올림픽대회 및 아시아경기대회 종목 경기단체 추천위원이 과반수를 차지하여야 한다.

제12조(기능) 위원총회는 다음 의안을 심의 의결한다.

- ① 위원총회의 권한에 속하는 임원의 선임 및 해임

- ② 사업계획 및 예산(안) 심의, 승인
- ③ 사업보고 및 결산보고의 승인
- ④ 규정의 개정
- ⑤ 기타 상임위원회에서 토의 결정된 사항 중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3조(총회의 소집) ① 위원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의 2종으로 하고,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정기총회는 매 회계년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이를 소집한다. 다만, 상임위원회의 결의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서면 요청이 있을 때에는 2주일 이내에 이를 소집하여야 한다.

- ② 위원총회의 소집은 토의사항을 명기하여 2주일 전(긴급을 요할 때는 1주일 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 ③ 본위원회의 위원장이 총회의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유고시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부위원장이 의장직을 대행하며, 위원장 자신의 진퇴에 관한 의제를 심의할 경우에는, 위원 중에서 임시의장을 선출하여야 한다.

제14조(성원 및 의사) ① 위원총회는 이 규정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의사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행사한다. 다만, 제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이 상당한 사유로 위원총회에 참석치 못할 때에는, 위원총회 개최 48시간 전까지 당해 단체 회장단 중에서 대리인을 본위원회에 문서로 제출한 후, 당해 총회에 한하여 참석시킬 수 있다.

- ② 다만 올림픽대회와 관련한 의안을 처리할 경우는 상임위원 및 올림픽종목경기단체 추천위원만이 결정권을 가질 수 있다.

제14조의 2(이의신청) 위원총회 결정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결정일로부터 21일 이내에 IOC '스포츠중재재판소'(Court of Arbitration for

Sport)에 중재요청을 할 수 있다.

제6장 상임위원회

제15조(구성) 상임위원회는 IOC위원, 위원장, 부위원장 및 상임위원으로 구성하고, 본위원회의 최고 집행기관이다.

제16조(기능) 상임위원회는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위원총회의 결의 또는 위임된 사항의 집행 처리
2. 위원총회 부의사항의 작성 상정
3. 다음 연도 예산(안) 및 사업계획의 작성
4. 긴급을 요하는 사항의 처리

다만, 중요한 사항은 차기 위원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5. 기타 본위원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17조(소집 및 의사) 상임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다만, 상임위원 3분의 1 이상이 목적을 제시하고 소집을 요청할 때에는 1주일 이내에 소집하여야 한다. 상임위원회의 성원은 재적인원 과반수 출석으로 하고, 의사는 출석위원의 과반수로써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제18조(서면결의) 위원장은 상임위원회에 부의할 사항 중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 결의에 부의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위원장은 그 결과를 차기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장 각종 위원회

제19조(대한대학스포츠위원회) ① 국제대학스포츠연맹(FISU) 헌장 제1조의 목적에 부응하고, 국내 대학스포츠의 발전 도모를 위하여 대한대학스포츠위원회를 둔다.

② 동 위원회에 관한 규정은 상임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20조(특별위원회 설치) ① 본위원회 사업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상임위원회의 의결로써 전문위원회 및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본위원회 특별위원회로서 문화위원회, 의무위원회, 미디어위원회, 올림픽아카데미위원회, 남북체육교류위원회, 선수위원회, 방송위원회를 둔다.

③ 전 항의 특별위원회 또는 전문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은 상임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8장 재 정

제21조(재정) 본위원회의 재정은 다음의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1. 회 비
2. 보 조 금
3. 표장사업 수익금
4. 찬 조 금
5. 기 타

제22조(임원 보수의 제한) ① 본 위원회의 비상근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상근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② 본 위원회의 임원에 대하여 업무수행에 필요한 여행비, 숙박비 등 필요한 비용에 대해서는 실비로 보상할 수 있다.

제9장 표장·기 및 기타

제23조(올림픽상징 보호) 올림픽헌장 제8조~제14조 부속규칙 제1~3항 및 제32조에 의거하여, 본위원회는 국내에서 올림픽기, 올림픽표장과 표어, 그리고 “올림픽” “올림픽아드”라는 용어를 보호할 책임을 갖고 있는 유일한 기관이다.

- 제24조(표장, 기 및 기타) ① 본위원회의 표장과 기는 본위원회의 독점적 소유물로, 표장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청색, 황색, 흑색, 녹색, 적색순으로 배열된 오륜기 중앙 상부에 태극을 결합 시킨 것으로 하며, 기는 테를 두르지 않는 백색 바탕의 중앙에 표장을 배열한 것으로 한다. 본위원회의 표장은 단색 또는 여러 색으로 표현할 수 있다.
- ② 본위원회의 표장과 기 그리고 전용자체(Logotype)는 올림픽운동과 관련된 활동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본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③ 본위원회는 국내올림픽운동 진흥의 재원조달을 위해 위원회 표장의 상업적 사용을 허용할 수 있다. 단, 표장의 상업적 사용은 상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④ 그밖에 본위원회가 주관한 스포츠행사나 아마츄어 스포츠활동에 관련된 개인 및 집단은 물론 선수 성명, 경기장면 사진 등의 상업적 사용도 본위원회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0장 사 무 국

제25조 본위원회의 사무집행을 위하여 대한체육회 사무처 내에 전담 사무부서를 둔다.

부 칙

제26조(규정 개정) 본위원회의 규정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상임위원회의 결의,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제안하며, 위원총회에서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7조(시행세칙) 본 규정 시행에 필요한 제 규칙은 상임위원회에서 정한다.

제28조(규정의 해석) 본 규정의 해석에 있어 이의가 있거나, 또는 올림픽헌

장과 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올림픽헌장이 우선한다.

제29조(경과조치) 제4장 제6조에 관한 규정은 이 규정 개정 당시의 임원에게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30조(시행일) 본 규정은 2007년 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록 3>

대한체육회 정관

제 1 장 총 칙

제 1 조(설립근거 및 명칭) 이 법인은 국민체육진흥법 제23조에 의하여 설립되며 그 명칭은 대한체육회(이하 본회라 칭한다)라 칭하고 외국에 대하여는 Korea Sports Council(약칭 KSC)이라 칭한다.(개정 '94. 4. 2)

제2조(목적) 본회는 체육운동을 범국민화하여 학교체육 및 생활체육의 진흥으로 국민의 체력향상과 건전하고 명량한 기풍을 진작시킴과 아울러 본회에 가맹한 경기단체를 지원육성하고 우수한 경기자를 양성하여 국위선양을 도모함으로써 민족문화 발전에 이바지하고 나아가 스포츠를 통한 국제친선과 세계평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00. 12. 5)

제3조(주소) 본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송파구 방이동 88번지에 두고 각 시·도(해외지부 포함)에 지부를 둔다.(개정 '90. 4. 13)

제4조(사업)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전반적 체육운동에 관한 기본방침의 심의결정
2. 체육운동의 아마츄어정신 확립
3. 각 가맹경기단체와 지부의 지원육성(개정 '00. 12. 5)
4. 전반적 체육운동에 관한 정부자문에 응하고 정부 기타 관계기관에 대한 건의
5. 올림픽경기, 아시아경기, 국제대학생경기 및 이에 준하는 국제적 종합경기에 관한 사업
6. 스포츠의 국제교류

7. 전국체육대회 및 전국소년체육대회등 각종 종합체육대회의 개최(개정 '94. 3. 16)
8. 학생의 보건 및 체력향상에 관한 조사연구와 체육의 육성
9. 국민체력향상에 관한 조사연구 및 국민체육의 육성보급
10. 경기기술의 연구 및 향상
11. 과학적 방법에 의한 경기자 및 경기지도자의 양성
12. 체육 및 경기시설의 설치관리와 용기구에 관한 연구개발
13. 체육운동에 관한 자료수집과 조사
14. 체육운동에 관한 선전계몽
15. 체육운동에 관한 각종 간행물의 발간
16. 본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본회회관의 임대사업, 수영장, 스케이트장 및 기타 훈련시설의 일반공개사업(개정 '89. 6. 21)
17.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수익사업

- 제5조(법인공여이익의 수혜자) ① 이 법인의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이익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미리 주무부처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대가의 일부를 수혜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 ② 이 법인의 목적사업수행으로 인하여 제공되는 이익은 수혜자의 출생지, 출신학교, 근무처, 직업 또는 기타 사회적 지위 등에 의하여 차별을 두지 아니한다.

제2장 조 직

- 제6조(조직가맹) ① 본회는 본회가 가맹을 인정하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종목별 아마츄어 경기단체로써 조직한다.(개정 '91. 4. 6)

- ② 기타 본회가 특별히 인정하는 체육단체도 가맹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본회와의 관계는 이를 상호 협의하여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개정 '91. 4. 6)

제7조(가맹경기단체의 권리) 가맹경기단체는 본회에 대하여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권리를 가진다.

1. 총회에 대의원을 파견하여 발언권 및 의결권을 가진다.
2. 본회에 대하여 건의 및 소청할 수 있다.
3. 본회가 주최, 주관 및 승인하는 사업에 참가할 수 있다.(개정 '91. 4. 6)
4. 본회가 승인하는 사업을 주최, 주관, 후원할 수 있다.(개정 '91. 4. 6)
5. 가맹경기단체의 목적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본회에 국고보조금 또는 서울 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 지원금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91. 4. 6)

제8조(가맹경기단체의 의무) ① 가맹경기단체는 본회에 대하여 다음의 각호에 규정하는 의무를 가진다.(개정 '91. 4. 6)

1. 본회의 정관, 규정 및 결의된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2. 가맹경기단체의 사업계획서, 예산서 및 전년도 사업보고서, 수지결산서를 그 단체의 총회 종료 후 10일 이내에 본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00. 12. 5)
- ② 법인격을 취득한 가맹경기단체의 경우에도 제1항 제2호에 명기한 서류를 본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기타 임원, 조직, 각종규정의 변동이 발생한때에도 그 내용을 본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91. 4. 6)

제9조(가맹) 본회에의 가맹은 본회 이사회를 거쳐 총회의 의결로써 확정한다.

제10조(탈퇴) ① 본회에 가맹한 단체의 탈퇴는 임의로 할 수 있으며 이는 본회 이사회의 결의로써 확인되고 이사회는 이를 차기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② 본회에 가맹한 단체가 그 자격을 상실하였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본회 이사회를 거쳐 총회의 의결로써 탈퇴케 한다.
- ③ 가맹 및 탈퇴에 관하여 필요한 규정은 따로 이를 정한다.

제3장 임원

제11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① 본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선임임원

회 장 1인

부 회 장 약간인

이 사 20인 이상 47인 이내(회장, 부회장, 사무총장 포함)
(신설 '89. 6. 21)

감 사 3인

2. 대의원 각 가맹경기단체별 1인(신설 '89. 6. 21)

3. 위촉임원

명예회장 1인(신설 '89. 6. 21)

고 문 약간인

참 여 약간인

위 원 규정에 정한 인원(개정 '89. 6. 21)

- ② 전항의 부회장 중에서 필요에 따라 상근부회장 1인을 둘 수 있다.(개정 '89. 6. 21)

제12조(임원의 임기) ① 이사의 임기는 4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그러나 제13조제3항에서 정하는 당연직이사의 임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95. 3. 14)

- ② 임기의 기산은 일수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정기총회를 기준으로 하며, 임

원은 연임할 수 있다.

- ③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고 증원으로 인한 임원의 임기는 타 임원과 동일하다.
- ④ 임원의 임기중 부회장을 포함하는 전임원이 개선될 경우 잔여임기가 1년 이상일 때 예는 신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고, 1년 미만일 때에는 전임자의 잔여기간과 정규임기를 가산한 것으로 한다. 다만, 불분명한 때에는 임원을 개선한 총회에서 결정한다.
- ⑤ 임원은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자가 취임하기까지는 그 직무를 집행하여야 한다.
- ⑥ 위촉임원의 임기는 선임임원의 임기에 준한다.

제13조(선임임원의 선출방법) ① 회장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임하되, 회장은 이 정관 제14조에 의하여 선출한다.

- ② 부회장 및 이사는 총회에서 선임하되, 상근부회장, 사무총장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임명한다.
- ③ 선임임원에는 시·도지부장이 추천한 7인내지 16인의 시·도대표와 임원정수의 5분의 1범위내의 체육관련단체의 장이 당연직이사로 포함되어야 한다. 이에 대한 당연직이사 선출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개정 '00. 12. 5)
- ④ 회장, 감사를 제외한 부회장, 이사의 결원이 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이를 보선할 수 있으며, 차기총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 ⑤ 대의원은 감사외의 선임임원에 피선될 수 없다.
- ⑥ 임원의 취임은 주무부처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전문개정 '94. 3. 16)

제13조의 2(임원의 사임) ① 개인적인 사정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임원이 사임하고자 할 경우에는 즉시 회장에게 사임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을 당연히 사임한 것으로 본다.

1. 정관 제17조의 3이 정하는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
2. 정관 제13조 제3항에서 정하는 당연직 이사의 경우 그 해당직위를 상실한 때
3. 특별한 사유없이 연속 3회 이상 이사회에 불참하거나 2년간 본회주최 행사에 참여하지 아니한 때
4. 기타 관계법령을 위반한 때(전문신설 '95. 3. 14)

제14조(회장선출방법) ① 회장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회장후보자 등록신청서를 총회 5일전까지 사무처에 제출하여 후보자 등록을 하여야 하며, 사무처는 총회 4일전까지 후보자 등록 공고를 한다. (전문개정 '02. 5. 16)

② 회장후보자는 학식과 덕망,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국내체육진흥과 올림픽 운동에 크게 기여하였거나, 기여할 수 있는 자 이어야 한다.(전문개정 '02. 5. 16)

③ 회장은 총회에서 무기명 비밀투표로 선거한다.

1. 총회는 출석대의원 과반수득표자를 회장당선인으로 결정한다.
2. 2인 이상이 입후보시 과반수 이상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상위득표자 2인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하여 다수 득표자를 회장당선인으로 결정한다.(전문개정 '94. 3. 16)

제15조(대의원의 선출방법) ① 본회 가맹경기단체는 회장, 부회장중에서 1인의 대의원을 총회개최 5일전까지 해당 단체의 장이 서면으로 추천하여야 한다.

② 해당단체의 장이 서면으로 추천한 대의원은 교체할 수 없다. 단, 추천된 대의원이 총회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해당 단체의 전무이사급 이상 직위자중에서 대리참석은 할 수 있으나, 표결권은 행사할 수 없다.(전문개정 '94. 3. 16)

제15조의 2(위촉임원의 선출방법) ① 명예회장은 총회에서 추대한다.

- ② 고문 및 참여는 필요에 따라 둘 수 있되,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이를 위촉한다.
- ③ 위원에 관하여는 각장에 규정한다.(전문개정 '94. 3. 16)

제16조(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할한다.

-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에는 회장이 지명하는 부회장이 회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 ③ 이사는 이사회를 조직하고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회의 직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다.
- ④ 명예회장은 이사회의 자문기관이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신설 '89. 6. 21)

- ⑤ 고문은 회장, 부회장의 자문기관이며, 참여는 이사회의 자문기관이다. 고문 및 참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17조(감사의 직무) 감사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본회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사항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를 감사하는 사항
3. 본회의 재산상황 또는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하여 회장, 이사회 또는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하는 사항
4.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비위가 있음을 발견할 때에는 이를 이사회,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그래도 시정되지 아니할 때에는 주무부처장관에 보고 하는 사항
5. 제4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사항

제17조의 2(임원의 보수) 회장을 비롯한 비상근 임원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

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신설 '94. 3. 16.)

제17조의 3(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본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신설 '94. 3. 16.)

1. 대한민국 국적을 갖지 아니한 자
2. 미성년자
3.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4.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제 4 장 대의원총회

제18조(구성) 대의원총회(이하 총회라 칭한다)는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된 대의원으로 구성한다.(개정 '89. 6. 21)

제19조(기능) 총회는 본회의 최고의결기관으로서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선출에 관한 사항
2.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의 승인
4. 사업계획 및 사업보고의 승인
5. 정관규정에 의해 대의원총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신설 '89. 6. 21)
6. 기타 중요사항

제20조(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누되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정기총회는 회계년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이를 소집한다.

- ② 총회소집은 토의사항을 명기하여 7일전, 긴급을 요할 때에는 3일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 ③ 본회 회장이 총회의 의장이 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총회대 의원 중에서 임시의장을 선출할 수 있다. 회장이 의장이 되었을 때에는 표결권 및 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고 임시의장이 되었을 때는 의장이 의결에 있어서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다.
- ④ 총회는 제2항의 통지사항에 한하여서만 결의할 수 있다. 다만, 출석대의원 전원의 찬성이 있을 때에는 그 이외의 사항이라 할지라도 이를 부의하고 결의할 수 있다.

제21조(총회소집의 특례) ① 총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소집하여야 한다.

- 1. 재적이사 과반수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 2. 제17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 3. 대의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 ② 총회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총회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이상 또는 대의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주무부처장관의 승인을 받아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의한 총회는 출석대의원 중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22조(총회의결 제척사유) 의장 또는 대의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1. 임원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안으로서 자신이 본회와 이해가 상충되는 사항 (개정 '89. 6. 21)

제23조(의결정족수) ① 총회는 재적대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한다.

- ② 총회의 의사표결은 이 정관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출석한 대의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4조(임원의 불신임) ① 총회는 임원에 대하여 부분적 또는 전체적으로 해임을 의결할 수 있다. 다만, 그 임원이 취임한 날로부터 만 1년이 경과되어야 한다.

- ② 해임안은 대의원 재적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제의되고 재적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이를 결의한다.

- ③ 해임안이 결의되었을 때에는 당해임원은 즉시 해임된다.

제25조(임원의 발언권) 본회의 임원은 총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응답할 수 있다.

제26조(의사규정) 총회의 의사운영에 관한 규정은 이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 5 장 이 사 회

제27조(구성)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및 이사로 구성하며, 본회의 최고집행기관이다.

제28조(기능)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
4. 정관개정안 작성에 관한 사항(개정 '89. 6. 21)
5.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6. 이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7. 가맹경기단체의 지원육성에 관한 사항(개정 '00. 12. 5)
8. 각종위원회의 조정 및 통할
9. 사무처 및 선수촌의 지휘감독(개정 '90. 4. 13)
10. 총회 부의사항의 작성 상정
11. 사무총장 및 선수촌장의 임명동의(개정 '90. 4. 13)
12. 제규정의 제정
13. 기타 중요사항

제29조(의결정족수)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가 출석하지 아니하면 개최하지 못한다.

② 이사회 의사는 이 정관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출석한 이사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때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30조(소집) ① 이사회는 필요에 따라 회장이 소집한다.

② 이사회 의장은 회장, 부회장의 순으로 한다.

③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5일전에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④ 이사회는 제3항의 통지사항에 한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출석 이사전원의 찬성이 있을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제31조(이사회 소집의 특례) ① 회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로부터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7조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10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주무부처 장관의 승인을 받아 소집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32조(긴급처리) ① 회장은 그 내용이 경미하거나 또는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집행할 수 있다. 다만 즉시 소집되는 이사회에 이를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② 회장은 부의사항의 내용이 경미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결의로써 이사회 결의를 대신할 수 있다. 다만, 과반수 이사가 정식으로 회부할 것을 요구할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32조의2(KOC 임원의 발언권) 정관 제33조 규정에 의해 설치된 KOC의 명예총무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응답할 수 있다.(신설 '02. 3. 6)

제 6 장 대한올림픽위원회

- 제33조(설치) ① 대한올림픽위원회(Korean Olympic Committee, 약칭 KOC)는 그 소관사항에 관하여는 독자적 결정 및 시행의 권한을 가진다.
- ② 동위원회에 관한 규정은 동위원회 위원총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 7 장 각종위원회

제34조(학교체육위원회의 설치) 본회에 제4조제8호의 사업에 관한 사항을 조사, 연구, 심의 하고 이사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학교체육위원회를 둔다.

제35조(학교체육위원회의 조직) ① 학교체육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하

여 위원 25인 이내로 구성한다.

- ② 위원회에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3인, 위원 21인을 두되, 위원장은 이사 중에서 이사회 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지명하고 부위원장은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대학교 분야별로 각 1인을 위원호선에 의하여 선임한다.
- ③ 위원은 당해분야 학교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자 중에서 이사회의 추천에 의하여 회장이 위촉한다.

제36조(학교체육위원회의 임무) 학교체육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직접결정시행할 수 있고, 학생 경기활동에 관하여 이사회의 자문에 응하고 심의, 건의할 수 있다.

1. 학교체육의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2. 학생, 교직원의 체육진흥에 관한 사항
3. 학생, 교직원의 체력향상 및 학교체육진흥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4. 학생, 교직원의 체력검사에 관한 사항
5. 학생, 교직원의 보건위생에 관한 사항
6. 학교체육시설에 관한 사항
7. 학교체육행사에 관한 사항
8. 체육연구논문발표, 연구지발간 및 강습회개최에 관한 사항
9. 학교체육공로자 표창에 관한 사항
10. 청소년 체육진흥에 관한 사항
11. 신인발굴 사항에 관한 협조사항
12. 시·도 학교체육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13. 기타 학교체육에 관한 사항

제37조(생활체육위원회의 설치) 본회에 제4조제9호의 사업에 관한 사항을 조사,

연구, 심의하고 이사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생활체육위원회를 둔다.
(개정 '90. 4. 13)

제38조(생활체육위원회의 조직) ① 생활체육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위원 16인 이내로 구성한다.(개정 '90. 4. 13)

② 위원회에서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2인, 위원 13인을 두되, 위원장은 이사 중에서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지명하고, 부위원장은 직장체육, 지역체육분야별로 각 1인 을 위원호선에 의하여 선임한다.(개정 '90. 4. 13)

③ 임원은 당해체육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자 중에서 이사회의 추천에 의하여 회장이 위촉한다.

제39조(생활체육위원회의 임무) 생활체육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90. 4. 13)

1. 생활체육의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개정 '90. 4. 13)
2. 생활체육의 진흥방법에 관한 사항(개정 '90. 4. 13)
3. 직장체육의 지도육성에 관한 사항
4. 직장체육행사에 관한 사항
5. 사회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기장, 체육관(사설도장포함)의 시설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직장체육시설에 관한 사항
7. 시·도 생활체육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개정 '90. 4. 13)
8. 기타 생활체육에 관한 사항(개정 '90. 4. 13.)

제40조(여성체육위원회의 설치) 본회에 제4조제9호의 사업 중 여성체육에 관한 사항을 조사, 연구, 심의하고 이사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여성체육위원회를 둔다.

- 제41조(여성체육위원회의 조직) ① 여성체육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위원 15인 이내로 구성한다.(개정 '87. 3. 24)
- ② 위원회에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2인, 위원 12인을 두되, 위원장은 이사 중에서 이사회 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지명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에 의하여 선임한다.(개정 '87. 3. 24)
- ③ 위원은 여성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자 중에서 이사회의 추천에 의하여 회장이 위촉한다.

제42조(여성체육위원회의 임무) 여성체육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여성체육의 육성지도 및 보급에 관한 사항
2. 여성체육행사에 관한 사항
3. 여성체육시설에 관한 사항
4. 여성체육개발에 관한 사항
5. 여성체육관계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
6. 기타 여성체육에 관한 사항

제43조(경기력향상위원회의 설치) ① 본회에 제4조제5호, 제10호 및 제11호의 사업에 관한 사항을 조사, 연구, 심의하고 이사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경기력향상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에는 다음의 분과위원회를 둔다.

1. 스포츠과학 분과위원회

제44조(경기력향상위원회의 조직) ① 경기력향상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위원 15인 이내로 구성한다.(개정 '87. 3. 24)

- ② 위원회에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2인, 위원 12인을 두되, 위원장은 이사 중에서 이사회 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지명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에 의하여 선임한다.(개정 '87. 3. 24)
- ③ 위원은 당해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자 중에서 이사회의 추천에 의하여 회장이 위촉한다.
- ④ 위원회에는 필요에 따라 상근간사 약간인을 둘 수 있으며 이는 회장의 임명을 거쳐야 한다.
- ⑤ 분과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하여 위원 11인 이내로 구성하며, 당해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자 중에서 회장이 위촉하며 분과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분과위원회에서 호선한다.

제45조(경기력향상위원회의 임무) 경기력향상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종합적 경기력향상 기본계획
- 2. 국제경기대회 대비 강화훈련계획 수립
- 3. 스포츠과학의 연구발전에 관한 사항
- 4. 경기지도자의 양성 및 자질향상에 관한 사항
- 5. 과학적인 훈련방법의 개발에 관한 사항
- 6. 선수강화훈련 참가임원 및 선수선발에 관한 사항
- 7. 선수강화훈련의 실시, 지도, 감독, 평가분석에 관한 사항
- 8. 우수소질보유자의 발굴육성에 관한 사항
- 9. 선수강화훈련 참가임원 및 선수의 상벌에 관한 사항
- 10. 경기력향상연구연금 수혜자 및 체육장학금 수혜자 심사에 관한 사항
- 11. 기타 경기력향상에 관한 사항

제45조의 2(특별관계) 스포츠과학에 관한 연구 및 조사, 스포츠과학의 현장적용

및 연수, 보급에 관한 사항은 국민체육진흥공단 체육과학연구원에 이를 위탁하여 추진할 수 있다. (개정 '00. 12. 5)

제46조(규정) 각종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규정은 해당위원회의 제안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이를 정할 수 있다.

제47조(특별위원회) ① 본회는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로써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특별위원회의 명칭 및 조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로써 따로 이를 정한다.

③ 전 제1항의 위원회는 이사회의 자문기관이다.

제 8 장 가맹경기단체

제48조(단체성격 및 기관) 본회 가맹경기단체는 법인으로 할 수 있으며, 기관으로서 대의원 총회 및 이사회를 둔다.(개정 '91. 4. 6)

제49조(임원 선임 및 보고) ① 가맹경기단체의 선임임원은 당해경기단체 대의원 총회에서 선임하고 이를 본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00. 12. 5)

② 선임 임원의 변동이 발생한 때에도 이를 본회에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00. 12. 5)

제50조 “삭제”(‘02. 5. 16)

제51조 “삭제”(‘02. 5. 16)

제51조의 2 “삭제”(‘06. 3. 29.)

제51조의 3 “삭제”(‘06. 3. 29.)

제51조의 4 “삭제”(‘06. 3. 29.)

제 9 장 지 부

제52조(설치) ① 본회의 사업목적 수행을 위하여 시·도에 지부를 두고, 해외에도 지부를 둘 수 있다.(개정 '87. 3. 24)

② 시·도지부(해외지부 포함)는 법인으로 할 수 있다.(신설 '90. 4. 13)

제53조(규정) 지부의 조직 운영에 관한 규정은 따로 이를 정한다.(개정 '87. 3. 24)

제 10 장 한국스포츠중재위원회

제54조(한국스포츠중재위원회) ① 본회, 가맹경기단체, 시도지부, 그 구성원 등 (본조에서 ‘관련당사자’라 한다)간에 발생하는 분쟁을 스포츠 분야의 특수성을 감안한 전문적인 조정 및 중재를 통하여 원만하고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한국스포츠중재위원회를 두 기로 한다. (신설 '06. 3. 29)

② 한국스포츠중재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분쟁에 대하여 관련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 조정 및 중재절차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 (신설 '06. 3. 29)

1. 구성원간의 분쟁 또는 대립

2. 선수의 경기참가 자격 관련 분쟁

3. 국제대회 대표선수 선발 관련 분쟁

4. 도핑 판정 관련 위 각호의 분쟁

5. 기타 조정 및 중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스포츠 관련 분쟁

③ 한국스포츠중재위원회는 조정 및 중재업무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에 따른 중재패널을 구성하여 수행하고, 행정업무에 관하여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 감사를 통하여 그 업무를 집행한다. (신설 '06. 3. 29)

④ 기타 한국스포츠중재위원회의 구성, 운영, 중재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규정을 두어 이를 정한다. (신설 '06. 3. 29)

제 11 장 자산 및 회계

제55조(자산) 본회의 자산은 다음과 같다.

1. 본회 소유의 동산 및 부동산
2. 기 금
3. 자산으로부터 생기는 과실
4. 회 비
5. 정부 및 공공단체의 보조금
6. 사업수입금
7. 기부금 및 찬조금
8. 기타 수입금

제56조(자산의 구분) ① 본회의 자산 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재산은 기본재산으로 한다.

1. 부동산
 2. 기 금
 3.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기본재산에 편입되는 자산
- ② 본회의 자산 중 전항 각호 이외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 ③ 기부금품은 그 기부자의 지정에 따른다.

제57조(재산관리) 본회의 기본재산을 양도, 증여, 교환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고자 할 때, 또는 업무의 부담이나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 및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부처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차입금(당해 회계년도내의 수입으로 상환하는 일시 차입금은 제외)에 대하여도 같다.

제58조(사업계획, 예산, 결산의 승인) ① 본회의 사업계획과 예산안은 매회계년도마다 회장이 이를 편성하여 이사회 및 대의원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부처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전항의 경우 제4조 제8호 및 제9호의 사업계획과 예산안은 학교체육위원회, 생활체육위원회 및 여성체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업계획 및 예산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부처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본회의 결산은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회장이 작성하여 재산목록, 사업보고서 및 재산증감사유서와 함께 감사의 의견서를 첨부, 주무부처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9조(기금 및 적립금) ① 본회는 이사회 및 대의원총회의 의결을 거쳐 특별한 목적을 위한 기금 또는 적립금을 둘 수 있다.

② 전항의 기금 및 적립금은 특별회계로 한다.

제60조(회계년도) 본회의 회계년도는 국고회계년도에 따른다.

제61조(가맹경기단체 등의 회계감사) 본회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도지부와 가맹경기단체의 사업 및 경리를 감사할 수 있다.

제 12 장 사무처 및 선수촌

제62조(사무처 및 선수촌) ① 본회에 사무처와 선수촌을 둔다.(개정 '90. 4. 13)

② 사무처에 사무총장과 기타 필요한 직원을 두며 사무총장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임명한다.

③ 선수촌에는 선수촌장과 기타 필요한 직원을 두며, 선수촌장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임명한다.(개정 '90. 4. 13)

제63조(사무총장 및 선수총장의 직무) ① 사무총장은 회장의 지휘 감독을 받아 사무처의 사무를 담당한다.

② 선수총장은 회장의 지휘 감독을 받아 선수총업무를 담당한다.(개정 '90. 4. 13)

제64조(사무처 및 선수총의 직제 및 규정) 사무처 및 선수총의 기구, 조직, 직제와 복무에 관한 규정은 따로 정한다.(개정 '90. 4. 13)

제64조의 2(경영공시) 본회는 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주요사업의 추진계획 및 성과 등을 공시한다. (신설 '02. 3. 6)

제 13 장 보 칙

제65조(표창 및 징계) 본회는 체육계에 공적이 있는 단체 및 개인을 표창하고 비위가 있는 단체 및 개인을 징계하는 권한을 가진다.

제66조(규정) 표창 및 징계에 관한 규정은 따로 이를 정한다.

제67조(정관개정) ① 본회의 정관개정은 이사회 결의 또는 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제의되며 재적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정관의 변경은 주무부처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8조(시행세칙) 이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세칙 및 제규정은 이사회 의결로써 결정 시행한다.

제69조(해산) ① 본회는 다음 사유로 해산한다.

1. 재적대의원의 4분의 3이상의 해산결의
 2. 주무부처장관의 설립허가 취소
- ② 본회가 해산하였을 때에는 잔여재산은 주무부처장관의 승인을 얻어 국가 또는 본회의 목적과 유사한 공공단체에 기부한다.

제70조(설립당초의 임원 및 임기) 이 법인 설립당초의 임원 및 임기는 다음과 같다.

<부록 4>

가맹경기단체 규정

제1장 총 칙

제 1 조(근거 및 목적) 본 규정은 국민체육진흥법 제23조 및 대한체육회(이하 "본회"라 한다)정관 제6조의 규정에 근거하고 가맹·탈퇴규정에 의거 가맹이 승인된 가맹경기단체(이하"경기단체"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명칭 및 주소 등) 경기단체는 당해 종목의 대표성을 가지고 전국을 통할할 수 있는 용어로서 각 경기단체가 명칭을 정하되, 대한○○○협회(회 또는 연맹)라 칭하고 영문명칭도 정해야 하며,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2장 사 업

제 3 조(목적 및 사업) 경기단체는 각 소관 경기운동을 국민에게 널리 보급하여 국민체력을 향상케 하며, 건전하고 명량한 기풍을 진작하는 한편 경기인 및 그 단체를 통할·지도하고 우수한 경기자를 양성하여 국위선양을 도모함으로써 민족문화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다음 사업을 관장한다.

1. 해당 경기의 기본방침 심의·결정
2. 해당 경기에 관한 자문 및 건의
3. 해당 국제경기대회의 개최 및 참가
4. 해당 전국규모연맹체와 지부의 관리 및 감독
5. 해당 경기대회의 개최 및 주관
6. 해당 경기기술의 연구 및 향상
7. 해당 경기자 및 심판, 운영요원 등의 양성

8. 경기시설에 관한 연구와 설치 및 관리
9. 해당 경기에 관한 자료모집 및 조사통계
10. 해당 경기종목에 관한 선전·계몽
11. 해당 경기단체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 4 조(사업의 위임) 경기단체는 전국규모연맹체에게 그의 희망에 따라 가능한 각 연맹체소관범위내에 경기대회 개최권을 줄 수 있다. 다만, 전국규모의 선수권대회는 중앙경기단체가 주최하여야 한다.

제3장 권리와 의무

제 5 조(권리) 경기단체는 본회에 대하여 다음의 권리를 갖는다.

1. 본회 대의원총회에 대의원을 파견하여 발언권 및 의결권을 갖는다.
2. 본회에 대하여 건의 및 소청할 수 있다.
3. 본회가 주최·주관 및 승인하는 사업에 참가할 수 있다.
4. 본회가 승인하는 사업을 주최·주관 및 후원할 수 있다.
5. 경기단체의 목적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본회에 국고보조금 및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 6 조(의무) 경기단체는 본회에 대하여 다음의 의무를 갖는다.

1. 본회 정관·제규정 및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2. 해당 국제경기연맹의 제반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3. 경기단체의 사업계획서, 예산서, 전년도 사업보고서 및 결산서를 그 단체의 총회 종료후 10일 이내에 본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6 조의 2(관련당사자간의 분쟁해결) 경기단체는 본회와 시·도체육회는 물론

당해 단체의 지부 및 모든 소관단체 구성원간의 분쟁에 대하여 본회 정관 제10장 제54조에 의거 설치한 한국스포츠중재위원회에 그 조정 및 중재를 요청하여 해결함을 당해단체 정관(또는 규정)에 규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 29.)

- 제 7 조(경기단체 지도육성) ① 본회는 경기단체의 지도육성에 필요한 방안을 강구하고 경기인의 체육활동을 권장보호하거나 육성하여야 한다.
- ② 본회는 경기단체가 본회 정관, 규정, 지시사항의 위반, 경기단체장의 결원, 임원간의분쟁, 재정악화 등으로 사업수행이 불가능하거나 기타 경기력향상을 위해 정책적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기단체에 대해 본회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관리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
- ③ 관리단체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 의결로써 이를 따로 정한다.
- ④ 본 규정을 위반하거나 본회의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가맹·탈퇴규정에 의거하여 조치할 수 있다.
- ⑤ 경기단체로서 의무사항을 해태 할 경우에는 제5조에서 정한 권리에도 불구하고 본회 지원금 또는 지원사항을 감액, 회수, 중단 등의 불이익 처분을 할 수 있다.
- ⑥ 본회는 경기단체의 불투명한 회계처리 등 직무관련 비리 관련자에 대한 징계를 요청할 수 있으며, 경기단체는 심의·조사하여 징계 후 본회에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2007. 8. 3)

- 제 8 조(지부 및 전국규모연맹체) ① 경기단체는 당해 대의원총회의 승인으로 시·도 및 해외에 지부를 둘 수 있다.
- ② 경기단체는 당해 대의원총회의 승인으로 전국규모연맹체를 둘 수 있다.
- ③ 경기단체의 지부 및 전국 규모연맹체의 권리 및 의무는 제5조 및 제6조에 준하여 정한다.

제4장 임 원

제9조(임원의 종류 및 정수) ① 경기단체는 다음의 임원을 둘 수 있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본회의 승인을 얻어 이사를 증원할 수 있다.

1. 선임임원 : 회장 1인 · 부회장 약간인 · 전무이사 1인을 포함한 이사 28인 이내, 감사 2인
2. 대 의 원 : 지부 및 전국규모연맹체별 1인과 중앙대의원 약간인
3. 위촉임원 : 고문 약간인, 참여 약간인, 위원 약간인

② 선임임원중 감사 1인은 회계 전문가를 선출하여야 한다.

제10조(임기) ① 선임임원의 임기는 이사는 4년, 감사는 2년으로 하고, 임기의 기산은 본회 정기대의원총회를 기준으로 하며, 선임임원은 연임할 수 있다. 또한 위촉임원의 임기는 선임임원의 임기에 준한다.

② 회장 · 감사를 선임한 임원선출 당시의 임원의 정수중 부회장 및 이사의 사임 등으로 결원이 있을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이를 보선 또는 충원하여 차기 대의원총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보선임원의 임기는 잔여기간으로 한다.

③ 선임임원의 임기중 회장 · 부회장을 포함한 모든 선임임원을 개선할 경우 잔여임기가 1년 이상일 때에는 신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고, 1년 미만일 때에는 전임자 임기의 잔여기간과 정기임기를 가산한 것으로 한다. 다만, 불분명한 때에는 선임임원을 개선한 총회에서 결정한다.

④ 선임임원은 임기만료라 할지라도 후임자가 취임하기까지는 그 직무를 집행할 수 있다.

제11조(선임임원의 선출방법) ① 회장 · 부회장 · 이사 · 감사는 대의원총회에서 선출한다.

② 대의원은 감사 이외의 선임임원에 피선될 수 없고, 회장을 선출한 총회에 참

석한 대의원은 당해 집행부 선임임원에 피선될 수 없으며, 회장을 선출하지 않은 총회에 참석한 대의원은 총회개최 익일로부터 만 1년이 경과하여야 선임임원에 피선될 수 있다.

- ③ 감사를 제외한 선임임원은 사임 또는 임기 만료후 1년이 경과하여야 대의원으로 총회에 참석할 수 있다.
- ④ 경기단체의 각종 위원회 위원장은 가급적 이사를 위촉하여야 한다.
- ⑤ 전무이사는 회장이 임면하여 이사회에 동의를 얻는다.
- ⑥ 선임임원 및 위촉임원은 취임승낙서 및 이력서를 선임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당해단체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⑦ 선임임원중 회장, 부회장, 전무이사의 취임은 본회의 인준을 받아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에 신원사항을 조회할 수 있다.
- ⑧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선임임원이 될 수 없으며, 선임이후에도 당연히 선임임원의 자격이 상실된다.
 - 1. 대한민국 국적을 갖지 아니한 자
 - 2. 미성년자
 - 3.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4.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5.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6. 1년 이상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유효가 만료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제12조(위촉임원) ① 고문 및 참여는 필요에 따라 둘 수 있으며, 이사회의 추천에 의하여 회장이 이를 위촉한다.

- ② 고문은 회장의 자문기관이며, 참여는 이사회의 자문기관으로 필요한 경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제13조(동일인의 겸직제한) ① 동일인이 다른 경기단체의 대의원 또는 선임임원을 겸할 수 없다. 다만, 근대5종, 바이애슬론, 트라이애슬론의 경우 해당종목의 육성에 필요하다고 대의원총회가 의결한 경우에 해당종목 다른 경기단체의 임원을 선임할 수 있다.
- ② 선임임원 중 회계전문가로서 감사로 선임된 자는 타 경기단체의 감사를 겸임할 수 있다. (신설 2007. 8. 3)

- 제14조(선임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경기단체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할하며 총회 및 이사회회의장이 된다.
-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에는 회장이 지명하거나 이사회에서 정한 부회장이 직무를 대리한다.
- ③ 이사는 이사회를 조직하고, 이사회에 출석하여 경기단체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다.
- ④ 감사는 당해 경기단체의 회계 및 업무를 매년 1회이상 감사하고, 이를 대의원총회에보고한다. 필요한 경우 이사회에 출석하여 사전에 이를 진술할 수 있다.

제5장 대의원총회

- 제15조(구성) 대의원총회 (이하 "총회"라 칭한다)는 제16조에 의하여 선출된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 제16조(총회 구성) ① 각 시·도지부장 및 각급 전국규모연맹체의 회장은 총회회무대표로서 당연직 대의원으로 총회에 참석한다.
- ② 당연직 대의원이 부득이 총회에 참석하지 못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문서로써 부회장 1명을 지명하여 대리참석케 할 수 있다.
- ③ 중앙대의원은 당해 경기단체에서 대의원 또는 집행부 임원을 역임한 지

식·경험 및 덕망이 풍부한 자중에서 총회를 소집하는 이사회에서 선출할 수 있으나, 그 정원은 1호의 대의원수의 4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④ 미성년자는 대의원이 될 수 없다.

제17조(기능) 총회는 당해 경기단체의 최고의결기관으로서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선임임원의 선출에 관한 사항
2. 규약(또는 정관)의 제정 및 개정안에 관한 사항
3. 사업계획 및 예산승인에 관한 사항
4. 사업 및 결산승인에 관한 사항
5. 시·도지부(해외지부 포함) 및 전국규모연맹체에 관한 사항
6. 규약(또는 정관) 규정에 의해 대의원총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7. 그 밖의 주요사항

제18조(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고,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정기총회는 매년 1월말까지 개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본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총회 소집은 부의사항을 명기하여 2주일 전(긴급을 요할 경우에는 1주일 전)에 대의원 추천권한을 가진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회장은 총회의 의장이 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총회 대의원 중에서 임시의장을 선출할 수 있다. 회장이 의장이 되었을 때에는 표결권 및 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고 임시의장이 되었을 때는 의장이 의결에 있어서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 일 때에는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다.
(개정 2007. 8. 3)

④ 총회는 제2항의 통지사항에 한하여 의결할 수 있으며, 다만, 출석대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을 때에는 그 이외의 사항이라 할지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제19조(총회소집의 특례)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권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주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2. 각 시·도지부장 및 각급 전국규모연맹체의 회장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 ②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총회소집을 기피함으로써 총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이상 또는 각 시·도지부장 및 각급 전국규모 연맹체의 회장 3분의 1 이상이 소집요구 할 경우 본회의 승인을 받아 총회를 소집 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의하여 소집된 총회는 참석 대의원중 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20조(정족수) ① 총회는 재적 대의원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된다.

- ② 총회의 표결은 본회 정관 및 이 규정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출석한 대의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1조(선임임원의 불신임) ① 총회는 선임임원에 대하여 부분적 또는 전체적으로 해임을 의결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임원이 선임된 총회일로부터 만1년이 경과되어야 한다.

- ② 해임안은 대의원 재적 3분의 1의 찬성으로 제의되고, 재적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이를 결정한다.
- ③ 해임안이 의결되었을 때에는 당해 임원은 즉시 해임된다.

제22조(임원의 발언권) 임원은 총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응답할 수 있다.

제23조(의사) 총회의 의사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회에서 이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6장 이사회

제24조(구성) 이사회는 회장·부회장·전무이사 및 이사로 구성하며, 사무국장은 이사를 겸직할 수 있다.

제25조(기능) 이사회는 당해 경기단체의 최고 집행기관으로서 다음 사항을 처리·집행한다.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업무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사업보고 및 결산, 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
4. 규약(또는 정관)의 제정 및 개정안 작성에 관한 사항
5. 총회의 위임에 따른 제규정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6. 전국규모연맹체의 조정 및 통할에 관한 사항
7. 각종 위원회의 조정 및 통할에 관한 사항
8. 사무국의 운영에 관한 사항
9. 총회 부의사항의 작성 및 상정에 관한 사항
10. 그 밖의 주요 사항

제26조(정족수)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원된다.

② 이사회의 표결은 출석한 이사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의장은 의결에 있어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제27조(소집) ① 이사회는 필요에 따라 회장이 소집한다.

② 이사회 의장은 회장·부회장·전무이사 순으로 한다.

③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부의사항을 명기하여 각 이사에 회 의 3 일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제28조(이사회 소집 특례) ① 회장은 재적이사 과반수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사회 소집을 기피함으로서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본회의 승인을 받아 소집 할 수 있다.

제29조(긴급처리) ① 회장은 그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를 집행할 수 있다. 다만 즉시 소집되는 이사회에 이를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회장은 부의사항의 내용이 경미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결의로써 이사회 의 결을 대신할 수 있다. 다만, 과반수 이사가 정식으로 회부할 것을 요구할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7장 각종 위원회

제30조(설치) ① 경기단체는 필요에 따라 이사회 의결로써 경기위원회, 선수자격심의 위원회심판위원회, 상벌위원회, 생활체육위원회 등을 설치하고 명칭 및 주요 기능·운영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② 각종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 위원 약간인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회장이 지명하고, 위원은 당해 분야에 전문가로 회장이 위촉한다.

제8장 전국규모 연맹체

- 제31조(설치) ① 경기단체가 전국규모연맹체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
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② 전국규모연맹체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기본사항은 규약 및 임원인준 사
항을 포함하여 해당 경기단체에서 정한다.

제9장 경기단체 시·도지부

- 제32조(설치) ① 경기단체는 시·도 및 해외에 지부를 둘 수 있으나, 해외지
부는 대의원을 파견할 수 없다.
- ② 경기단체 시·도지부는 당해 경기단체에 대하여는 지부로서의 권리와 의
무를 가지며, 각 시·도 단위를 표시하는 독자적인 명칭을 가지고 시·도
체육회에 각각 가맹하여야 한다.
- ③ 경기단체 시·도지부는 산하단체로서 각 시·군·구에 지부를 둘 수 있다.
- ④ 경기단체 시·도지부는 그 사무소를 시·도체육회 소재지에 둔다. 다만,
지역적인 특성에 비추어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⑤ 경기단체 시·도지부 규약은 경기단체의 규약(또는 정관)을 준수하여 제
정하되 경기단체를 경유하여 시·도체육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회운영규정에 관한 사항은 해당 경기단체 지도·감독을 받는다.
- ⑥ 경기단체 시·도지부 선임임원은 시·도체육회의 인준을 받아야 하며,
시·도체육회는 당해 시·도 경기단체 선임임원 인준시 해당 경기단체에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
- ⑦ 경기단체 시·도지부는 해당 경기단체에 시·도체육회의 규약승인 및 인
준사항을 즉시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를 받은 경기단체는 시정사항이 있
으면 2주일 이내에 사실을 적시하여 해당 시·도체육회에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 ⑧ 시·도체육회는 시정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이를 처리하여

야 하며, 불분명한 경우에는 본회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

- ⑨ 경기단체 시·도지부 임원이 경기단체 또는 시·도체육회로부터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징계처분 단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으며, 징계에 관한 세부사항은 경기단체상벌규정 및 시·도체육회의 상벌규정에 따른다.
- ⑩ 전기 9개항에 규정된 이외의 사항은 본회 정관 및 본 규정, 시·도체육회 및 각 경기단체 규약(또는 정관) 등을 준용한다.

제33조(경기단체 시·도지부총회) ① 경기단체 시·도지부 총회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 1. 본 규정 제16조 제1항에 준한 시·군·구 지부별 대의원 각 1인
- 2. 본 규정 제16조 제3항에 준한 시·도지부 중앙대의원 약간인
- 3. 경기단체 시·도지부 소재지의 단체군별 대의원 각 1인(사회인군, 학교군)
- ② 전항 제1호에 의한 총회 구성이 곤란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시·도체육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과 같이 총회를 구성한다.
- 1. 등록단체(팀)별 대의원 약간인
- 2. 본 규정 제16조 제3항에 준한 경기단체 시·도지부 중앙대의원 약간인
- ③ 전 제1항 제3호의 단체군 대의원은 경기단체 시·도지부장이 소집한 단체군의 대표자 회의에서 선출한다. 동일인이 2개의 단체군의 대표자회의의 대표가 될 수 없으며, 미성년자도 대표자회의의 대표가 될 수 없다.
- ④ 전 제2항 제1호의 등록단체별 대의원의 수는 등록선수의 비율에 따라 그 정원을 정하되, 시·도체육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0장 자산 및 회계

제34조(자산) 경기단체 자산은 다음과 같다.

- 1. 소유의 동산 및 부동산
- 2. 기금

3. 자산으로부터 생기는 과실
4. 회비
5. 본회 지원금(국고 및 국민체육진흥기금)
6. 사업수입금
7. 기부금 및 찬조금
8. 기타 수익금

제35조(자산의 구분) ① 경기단체의 자산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은 기본재산으로 한다.

1. 부동산
 2. 기금
 3.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기본재산에 편입되는 자산
- ② 경기단체의 자산중 전항 각 호 이외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 ③ 기부금품은 그 기부자의 지정에 따른다.

제36조(재산관리) 경기단체의 기본재산을 양도, 증여, 교환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담보에 제공제공하고자 할 때, 또는 업무의 부담이나 권리의 표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 및 총회의 결의를 거쳐 본회 또는 주무부처장관(법인에 한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차입금(해당 회계년도내의 수입으로 상환하는 일시 차입금은 제외)에 대하여도 같다.

제37조(기금의 운영) 각종 기금별로 계정을 따로 정하고 매 회계연도 결산서에 기금적립실을명기해야 하며, 이사회 결의로 기금운영규정을 따로 정해야 한다.

제38조(회계연도) 회계연도는 본회의 회계연도와 동일한 매년 1월 1일부터 당해 연도말 12월31일까지로 한다.

제39조(예산편성 및 결산) ① 세입·세출예산안은 매년 정기총회 개최 전까지 편성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매 회계연도 종료후 1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1장 사무국

제40조(사무국) ① 경기단체는 사무 집행을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 사무국장 1인과 기타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으며, 사무국장은 회장이 임명하고 경기단체 사무를 관장한다.

제41조(사무국 규정) 사무국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이를 따로 정한다.

제12장 부 칙

1. 이 규정에 의거하여 제정된 각 경기단체의 규약(또는 정관으로 이하 같다)은 본회에 보고한 날로부터 유효하며, 수정이 있을 때마다 본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보고된 규약에 대하여 개·수정 및 삽입이 필요한 때에는 본회의 결정한 바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2. 이 규정은 각 경기단체 규약에 우선하며, 당해 단체규약을 이 규정에 맞게 변경하지 아니하여 이 규정과 당해 단체규약이 상이할 경우에는 반드시 이 규정에 따라야 한다. 본회 정관에 규정한 조항을 준용할 수 없는 것으로서 이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 및 각 경기단체 규약의 해석상 불분명한 사항은 본회가 정한 바에 따른다.
3. 이 규정의 시행일 현재의 가맹경기단체 임원(감사 포함)의 임기는 2005년

도 정기대의원총회(개최일)까지로 한다.

4.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대의원총회의 승인으로 제정·시행되며 (2004. 2.11), 제정 이후의 변경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5. 이 개정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2006. 9. 27)
6. 이 개정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2007. 8. 3)
7. 이 개정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2008. 1. 29)

<부록 5>

시·도지부 규정

제1장 총 칙

제 1 조(근거 및 목적) 본 규정은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에 의거한 본회 정관 제53조 규정의에 의해 지부로써 설치된 시·도 체육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명칭 및 주소) 각 시·도체육회는 본회 시·도지부로써 지역을 통할할 수 있는 용어로 ○○○○체육회로 정하고, 영문명칭도 정해야 하고 사무소는 각 시·도청 소재지에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 3 조(설치목적) 체육운동을 범시(도)민화하여 학교체육 및 생활체육의 진흥으로 시(도)민의체력향상과 건전하고 명량한 기풍을 진작시킴과 아울러, 가맹경기단체와 체육단체를 통할지도하고 우수한 경기자를 양성하여 스포츠를 통한 시(도)민의 위상을 선양도모 하므로써 시(도)민 문화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4 조(사업) 각 시·도체육회는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관장한다.

1. 지역 체육에 관한 기본방침의 심의 결정
2. 각 가맹경기단체와 각급 체육회의 육성지도 감독
3. 시·도 및 국가간의 체육교류
4. 지역 체육대회 개최 및 본회가 주최, 주관, 승인한 사업에 참가 및 주최, 주관, 후원, 지원 등
5. 각종 체육대회 행사의 관리·지도

6. 지역 주민체력향상에 관한 조사연구 및 지방체육의 육성 보급
7. 학생의 보건 및 체력향상에 관한 조사연구와 학생체육의 육성
8. 경기기술의 연구
9. 경기자 및 경기지도자 육성
10. 체육시설에 관한 설치 및 관리
11. 체육에 관한 홍보 및 각종 자료 수집, 각종 간행물의 발행
12. 체육에 관한 건의 및 소청
13. 전반적 체육에 관한 지방행정의 정책을 실현하고 지방정부 기타 관계 기관에 체육에 관한 건의 및 자문
14. 목적달성을 위한 수익사업 및 기타 필요한 사업

제2장 조 직

제5조(조직) 본회가 가맹을 승인한 경기단체의 시·도지부가 시·도체육회로부터 가맹을 승인받은 각 당해 지역을 대표하는 종목별 경기단체로써 조직한다.

제6조(권리) 각 시·도체육회는 본회에 대하여 다음의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1. 본회에 대하여 건의 및 소청할 수 있다.
2. 본회가 주최 주관 및 승인하는 사업에 참가할 수 있다.
3. 본회가 승인하는 사업을 주최 주관 및 후원할 수 있다.

제7조(의무) 각 시·도체육회는 본회에 대하여 다음의 각 호의 의무를 가진다.

1. 본회의 정관, 제규정 및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사업계획서, 예산서 및 사업보고서, 결산서를 총회 종료후 10일이내에 본회에 보고 하여야 한다.

3. 본회 정관 및 동 규정에 준하여 규약을 제정하여 본회에 보고하고, 이의 개·수정이 있을 때마다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4. 임원의 선임 및 개선이 있을 때마다 이를 본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7 조(의무)의2(관련당사자간의 분쟁해결) 시.도체육회는 본회와 중앙경기단체는 물론 당해지부의 경기단체 및 산하 각급체육회 구성원간의 분쟁에 대하여 본회 정관 제10장 제54조에 의거 설치한 한국스포츠중재위원회에 우선적으로 조정 및 중재를 신청하여 해결함을 당해 지부 규정에 규정하여야 한다. (2008. 1. 29, 개정)

제 8 조(가맹 및 탈퇴) ① 각 시·도체육회에 경기단체의 가맹은 이사회를 거쳐 대의원총회의 의결로써 확정한다.

② 가맹 및 탈퇴에 관하여 본회 가맹·탈퇴규정에 따라 이를 따로 정한다.

제3장 임 원

제 9 조(임원) ① 대의원총회와 이사회의 구성 및 성격은 본회 정관에 규정한 바에 각각 준한다.

② 집행부의 선임 임원 수는 각 시·도체육회의 실정에 맞추어 운용할 수 있다.

제10조(선임임원) ① 임원의 선임, 보선 및 임기는 본회 정관에 규정된 바에 각각 준한다.

② 시·도체육회장에는 도지사(시장), 부회장중 1인은 교육감 또는 부교육감을 각각 당연직으로 추대하여야 한다.

③ 회장, 부회장, 사무처장은 집행부의 당연직 이사이다.

제11조(각종위원회) ① 시·도체육회는 필요에 따라 각종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으나 학교체육위원회와 생활체육위원회는 반드시 설치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각종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3인, 위원 약간인으로 구성한다.

③ 각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본회 정관 및 관계 규정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로써 이를 따로 정한다.

제4장 가맹경기단체

제12조(가맹자격) 본회 가맹경기단체의 시·도지부만이 시·도체육회에 가맹한다.

제13조(기관) 시·도체육회에 가맹한 경기단체는 가맹경기단체별로 대의원 총회와 이사회를 둔다.

제14조(규약 및 임원인준 등) ① 시·도 가맹경기단체의 규약은 본회 가맹경기단체 규약(또는 정관)을 준수하여 제정, 경유하여 시·도체육회의 승인으로 유효하다.

② 시·도 가맹경기단체의 임원은 당해 대의원총회에서 선임하고 즉시 시·도체육회의인준을 받아야 하나 필요한 경우 본회 가맹경기단체 및 관계 기관에 신원사항을 조회할 수 있다.

③ 임원인준 내용에 하자가 있거나 결격사유에 저촉되었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임원인준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15조(적용) 가맹경기단체의 조직운영에 관한 규정은 본회 가맹경기단체 규정을 준용 하여 이사회 의결로서 이를 따로 정한다.

제5장 산하 각급체육회

제16조(각급 체육회) ① 각 도지부(체육회) 산하에 시·군체육회를, 시·군체육회 산하에 동·읍면체육회를 두고, 서울특별시 및 광역시지부(체육회) 산하에 구체육회를, 구 체육회 산하에 동체육회를 둔다.

② 시·군(구)체육회에 반드시 학교체육위원회와 생활체육위원회를 두며, 그 소관사항에 대하여는 시·군(구)지부 규약에 따른다.

③ 시·군(구)체육회에는 국민체육보급을 위한 지도반을 둔다. 지도반 편성은 시·도지부장이 한다.

제17조(조직구성) 산하 각급체육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개인 및 단체로써 조직한다.

1. 해당지역내 거주하는 자로서 체육에 관한 이해와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해당 체육회가 인정하는 개인

2. 상급체육회에 가맹한 경기단체의 해당지역지부 직장체육단체 및 학교체육단체

제18조(임원구성) 산하 각 급 체육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1. 정원

회장 1인

부회장 약간인

이사 20인 이상 47인 이내(회장, 부회장, 사무장 포함)

감사 3인

2. 시·군체육회장에는 해당 시·군의 시장, 군수를 당연직으로 추대하고, 부회장중 1인은 시·군 교육장이 되고 기타는 회장이 지명하되 중고등학교장 1인을 포함한다.

3. 동·읍(면)체육회장에는 해당 동·읍(면)장을 당연직으로 추대한다. 서울특별시 및 광역시의 각 구 및 동 체육회장에는 해당구청장 및 동장을 각각 당연직으로 추대한다.
4. 부회장 및 이사는 직근상급체육회의 인준을 얻어 이를 추대한다.

제19조(사업) 산하 각급 체육회는 다음 사업을 행한다.

1. 각종 운동경기대회
2. 각 직장 체육회의 조직육성
3. 기타 체력향상을 위한 각종 행사 및 상급체육회가 지시한 사항

제20조(조직운영) 산하 각급 체육회의 조직운영에 관하여 본회의 정관 및 각 시·도체육회 규약을 준용할 수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각 시·도체육회가 이를 지시한다.

제6장 자산 및 회계

제21조(자산의 구분) 시·도체육회의 자산은 다음과 같다.

1. 소유동산 및 부동산
2. 기금
3. 회비
4. 본회 지원금
5. 정부 및 공공단체의 보조금
6. 사업 수익금
7. 기부금 및 찬조금
8. 기타 수입금

- 제22조(예산편성 및 결산) ①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 예산안은 매년 정기총회 개최전까지 편성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② 매 회계연도 종료후 2개월 이내에 사업보고서 및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3조(기금 및 적립금) 이사회 및 대의원총회의 의결을 거쳐 특별한 목적을 위한 기금 또는 적립금을 운용할 수 있으며 특별회계로 한다.

제24조(회계연도) 회계연도는 본회의 회계연도와 동일한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5조(회계감사)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각 가맹경기단체 및 각급체육회의업무 및 회계업무를 감사할 수 있다.

제7장 사무처

- 제26조(사무처) ① 시·도체육회는 사무집행을 위하여 사무처를 둔다.
- ② 사무처에 사무처장과 기타 필요한 직원을 두며, 사무처장은 본회와 사전 협의를 거쳐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임면한다.
- ③ 사무처장은 회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사무처의 직무를 관장하며, 직원의 임면은 인사위원회의 제청을 거쳐 회장이 임면하되, 특별한 사유 없이는 그 신분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27조(직제 및 규정) ① 사무처의 기구, 조직, 직제 및 복무에 관한 규정은 이사회 의결로서 이를 따로 정한다.

- ② 사무처는 경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주요 사업의 추진계획 및 성과, 관련 규정등을 공시한다.

제8장 부 칙

제28조(경과사항) ① 본 개정 규정은 1979년 1월 8일부터 시행한다.

② 본 개정 규정은 1993년 4월 3일부터 시행한다.

③ 본 개정 규정은 1993년 8월 17일부터 시행한다.

④ 본 개정 규정은 1998년 5월 6일부터 시행한다.

⑤ 이 개정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2000.11. 3)

제29조(준용) 시·도지부 규약과 상이한 경우와 본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으로 본회 정관 및 기타 규정을 준용할 수 없는 것은 본회에서 별도 지시한다.

제30조(제한사항) 본 규정 및 정관 등에서 규정한 사항이나 지시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경우 본회는 제6조에서 정한 권리사항을 제한하거나 본회 지원금 또는 지원사항을 중단, 회수, 감액 등의 불이익 처분을 할 수 있다.

제3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2004. 2. 4)

제32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2006. 9. 27)

제33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2008. 1. 29)